

8·8 개각은 노동계급 공격, 대북 강경책, 4대강 계속한다는

이명박의 선전포고

8·8 개각 이후 이명박 정부는 “소통과 통합의 짧은 내각”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개각”(민주노동당)을 통해 MB 친위 돌격대 내각을 꾸린 것이 8·8 개각의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참패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졌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교육 정책과 KBS 노동자 파업으로 언론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신재민·이주호를 문화부·교육부 장관에 앉혀, 방 송 장악과 경쟁 교육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려 한다.

계속되는 천안함 의혹과 4대강 반대 여론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명박은 천안함 북풍물이에 앞장선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장관과 ‘4대강 속도전’을 벌이는 국토부·환경부 장관은 교체하지도 않았다.

친위 내각

이명박은 물러설 여유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물러섰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강용석 성희롱 발언 등은 정부·여당의 정치 위기를 가속화했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한나라당은 ‘세나라당’이라 불릴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명박은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친위 내각을 구축했다. 특히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는 이명박이 “마치 자신의 분신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다”(조선일보)는 총리 내정자 김태호만 봐도 드러난다.

김태호가 이명박 눈에 났던 계기는 경남도지사 시절 “불법에 무릎 꿇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며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섰을 때다. 그는 지난해 4대강 기공식 때 “불순한 세력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로 막나가는 ‘4대강 사업 전도사’이기도 하다.

‘MB 분신’답게 부패 혐의도 있다. 박연차에게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홍준표도 “돈을 받은 의혹 때문에 도지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총리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할 정도다.

‘왕의 남자’ 이재오는 특임장관에 내정됐다. 이재오는 4대강 사업 강행 같은 ‘특수 임무’를 하달 받았을 것이다. 최근 ‘재수생은 공장이나 농촌에 보내는 게 낫다’는 막말을 쏟아낸 이재오는 이처럼 독선적으로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노동부 장관에는 ‘무한신뢰’를 보낸다는 최측근 박재완을 앉혀 노동자 탄압 행동대장 역할을 맡겼고, 진수희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해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

한편, 경찰청장에는 조현오가 내정됐다. 조현오는 지난해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쌍용차 노동자 살인 진압을 진두지휘했고, 실적주의 강요로 경찰의 고문·가혹 행위를 낳은 장본인이다. 터져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물리력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이번 개각은 소통·친서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으려는 ‘친위 돌격 내각’이다. 민심과는 ‘불통’하고 4대강 삼질, 대북 강경, 반노동, 반민주의 한길을 가겠다는 이명박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렇게 작심하고 돌격하는 이명박 정부를 저지해야 한다.

박건희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한반도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을 시작한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자 한국 우익들은 그중 몇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떨어졌는지 계산해서 정부에게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 자존심과 공포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그 결과로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관심이 없다.

또, 미국은 초대형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서해 훈련에 동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7월 초를 피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뱉은 말은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이에 대응해 지난 이틀 동안 중국의 북해함대 전투기들은 서해에서 가상의 미군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벌였다.

이 소동의 출발점은 명백하다.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동아시아에 화려하게 복귀하려는 미국과 미국에 개입할 빌미를 주고 그 등에 얹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있는 힘을 다해 군사훈련으로 대적하려는 중국 정부의 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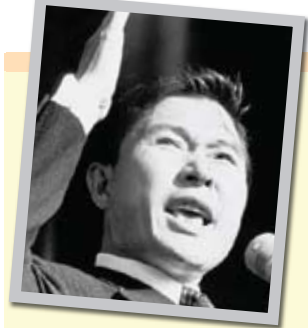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중미 사이의 불안정하지만 상호의존적 관계를 봤을 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버라이어티쇼가 고조될 수 있는 지점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패권 정책의 결판을 봐야 하고, 특히 이란 핵문제에서는 오히려 중국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거북한 처지다.

딜레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 북한 제재를 동시에 꺼내 든 것은 우연으로 보기에 너무 공교롭다.

한국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대북 제재 문제로 온갖 설레발을 떨었지만 미국 정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란 제재 강화였다.

▶ 2면으로 이어짐



김대중 사망 1년
김대중은 “성공한 민주주의 정치인”이었는가

▶ 10면

이명박의 노동계급 공격
공공요금 인상과 밀바닥 최저생계비

▶ 5면



가스 안전 관리 노동자가 말하는
CNG버스 폭발 사고의 진실

▶ 4면

이민숙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기고
체벌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 15면

세상을 이끄는

이명박: “총리가 성공적인 업무수행
을 한 것으로 국민들도 평가할 것”
정운찬: “대통령님 덕분에 대한
민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진입
하게 됐다”

덤 앤 더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정부를 만
드는 일에 지난 10개월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정운찬, 제 정신 맞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 입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
“대학 떨어진 애들 ... 공장이나
농촌에서 1~2년 일하고 그 성적
을 갖고 대학에 가라 ... 놀고먹는
애들은 없어야 한다”

본색을 드러내는 이재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대로 본
인과 그가족이 온전하게 살아남
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총 맞
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그 자식이
감옥 가거나 자살하거나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김문수의 이명박 저주?

“우리 해직교사들을 빨리 복직시키
기 위해 항소심에 성실히 임해, 최대
한 빨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원도교육청, 검찰의 거부로
일제고사 해임 항소 취하가 안 되자

“소장주의 아들, ‘경비원의 아들’,
‘참전용사의 딸’ 등 ... 천안함 북풍
에 이어 이번엔 친서민 ‘부풍(父風)’”
〈조선일보〉, 부풍(富風)이 아니라?

“한나라당은 어느새 ‘젊은 사람들
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부터 먹는 청년 유권
자 울렁증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일보〉

“친서민’을 외치는 것을 보고 적
어도 표면적으로 이 정부가 노무
현 정부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버렸다고 느끼고 있다”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전성철의 불만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 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상생 직업병 피해자들의 처
형’, ‘평운대 인종현 학생 실형 —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버리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 직시해야’, 《레프트
21》 판매자 벌금형 —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
하는 부당한 판결’, ‘유출된 문서를 통해 드러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
(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
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된다

독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나를 비롯한 6명의 《레프트21》 지지자
들은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
프트21〉을 판매하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사지가 들려 연행됐다. 그 후 법원
은 우리에게 8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형
을 선고했다(자세한 사건 내용은 〈레프트
21〉 37호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참고).

우리는 곧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 대책위)를 결성하
고,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
을 청구했다. 동시에 경찰의 위법한 체포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은 이번 벌금형이 부
당함을 보여 준다.

경찰은 〈레프트21〉의 좌파적 주장을
거리에서 알리는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천안함 사고를 공안 정
국 조성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처럼
싸우자는 주장을 거리에서 한 것 자체가
‘불법 집회’라는 것이다.

경찰은 우리가 정당한 판매 행위를 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으면
서도 사실을 감추려고 신문이 “B5 사이즈
흑백 유인물”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또 경찰은 연행 과정이 적법했다고 허
위 진술을 했다. 특히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서초경찰
서 경위 이종순은 뻔뻔하게도 처음부터
집시법 위반을 경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처음에 우리를 체포하려다 주위
시민들이 항의하자 우리를 가게 했다가
사람들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체포하려고
미행했다는 사실도 실토했다. “가급적 인
파가 없는 곳에서 충분한 지원 경력이 도
착한 이후 체포를 하기 위해 주격을 했습
니다.”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40분에 6인
이 청구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6인 대
책위’는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우리



7월 22일 맑시즘2010 참가자들이 〈레프트21〉 판매자들의 법정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하고 있다.

행위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옹호할 것이
다. 또한, 국내의 진보 단체들과 저명한
진보인사들의 지지 성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범한 사회적 지지 여론이 있어야만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자유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
는 〈레프트21〉 독자와 시민들의 지지
를 호소한다.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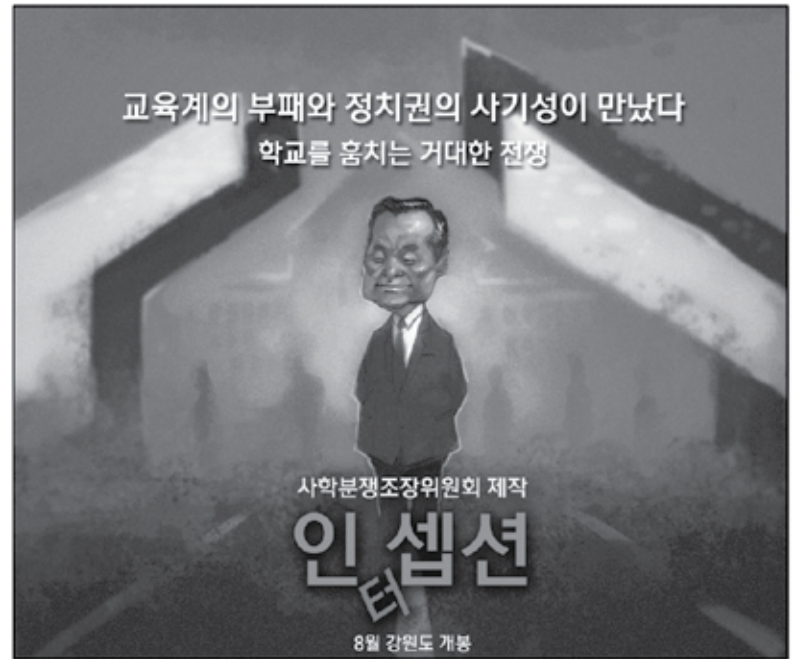
투쟁을 계속하려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
합니다. 당장 1심 재판 비용만 수백만 원
이 듭니다. 재판 비용과 투쟁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337446-442
(예금주 신명희)

6인 대책위에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연락처: 02) 777-2792, 010-3538-1069
이메일: support6@jinbo.net
트위터: http://twitter.com/support6twit

폴라주 34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인터셉션(가로침)



》 1면에서 이어짐

사실, 핵탄두를 1만 기나 보유한 미국
이 아직 핵무기를 가지지도 않은 이란을
압박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와 최근에는 베
트남)의 핵농축을 돕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키는 것이
중동 패권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이미 통과된 제4차 유엔 제재를
넘어 다른 나라들이 미국 수준의 독자적
이란 제재를 단행하기를 요구한다. 여기
서 이란과 상당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의 참가
가 중요하다.

대북 제재는 동맹(한국과 일본)과 잠재
적 적(중국)에게 모두 양보를 얻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제시됐다. 〈아시아 타임
스〉의 피터 리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어 미국에게 정치
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이란 제재 문제에
서 양보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부터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로 미국과 얼굴을 붉혀 동북아에서 가장 중
요한 미국 동맹 자리를 한국 정부에 빼앗긴
일본은 즉각 미국의 요구에 응하고 나섰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처했다.
미국 정부가 천안함과 대북 제재에서 한
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대가로 요구한 청
구서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한
국 정부의 고민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란 시장을 잃으면 그 자리를 중국, 러

시아, 터키 등 경쟁국에 뺏겨 다시 회복하
기 어려울 것 ... 이란은 석유와 가스 등 업
청난 자원을 보유해 미래 자원 개발을 위해
서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정부는 독자 제재를 하되 조용히 한다
는 어정쩡한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에 착
달라 붙는 ‘아메바’ 외교를 하면 만사형통
일 줄 알았던 이명박 정부는 갈수록 불안
정하고 복잡해지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도전 앞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제재와 이란 제재
를 동시에 껴낼 때 진정으로 노린 것은 중
국이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 자본이 제재
를 통해 버린 이란 석유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오늘날 이란은 중국의 3대
석유 수입국 중 하나가 됐다.

중국은 제4차 유엔 제재에 동의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 에너지 산업과 경제에
광범한 타격을 입히려면 중국의 대이란
투자와 경유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계산은 대북 제재 카드가 중국
에 애원하지 않고 중국을 추가 이란 제재
에 참가시키는 수단이자 두 나라 중 결국
누가 우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활동에 연관된 것
으로 추정되는 중국 은행 자체를 제재한
다는 민감한 내용을 제거한 것이 중국의
양보를 가져 오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이것은 초강력 대북 제재를 요구하던
원래 방침과 비교하면 누그러진 것이긴
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반대 급부로 북
한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 정부
에 상당히 양보하지 않고 중국에게 원하
는 것을 얻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피터 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미국이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 전선에서도 승리하려
든다면 중국은 어느 쪽에서든 미국이 원
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된
다면 오바마의 남은 임기는 참으로 흥미
로워질 것이다.”

냉소적인 관찰자에게는 그런 상황이 흥
미로울지 모르나 이곳에 살고 있는 평범
한 사람들은 열강들의 갈등을 불안한 눈
으로 쳐다봐야 할 것이다.

김용욱



동해에서 훈련하고 있는 한국 해군의 대형수송함 독도함(아래쪽)과 미 해군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함

판문점에서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박설·정선영

최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과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보수 언론들의 온갖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특권교육 폐지’ 소신을 지킨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은 7월 30일, 이번 결정의 주역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났다. 김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교원평가제 폐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일제고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보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마침 전북교육청은 인터뷰 바로 전날 자사고 지정 취소 입장을 발표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사고 문제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새로운 것은 없죠. 후보 시절 공약이었으니까요.” 김 교육감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자사고의 문제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냐면, 등록금이 3백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이것은 고교 평준화를 깨는 거예요. 자사고의 본질은 특권교육입니다.”

그는 ‘귀족학교’ 비판을 무마하려고 교과부가 제도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저들이 뭐라고 항변하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정원의 20퍼센트를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1백 퍼센트 접근할 수 있어야죠.”

실제로 수백여 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이 전형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비집고 입학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변화 열망

얘기는 자연스럽게 일제고사로 이어졌다.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시험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초등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실에선 나 외에는 다 적이죠. 함께 어게 걸고 가야 할 벗들이 싸워 이겨야 할 라이벌로 변해 버렸으니.



피말리는 시험과 경쟁에 진저리치는 학생들 진보교육감은 경쟁교육에 맞선 운동의 스피커가 돼야 한다.

“이런 고통의 사슬을 끊어 내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7월에 교과부가 실시한 일제고사에 대체학습을 도입했고, 9월 도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도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이것도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제 문제에서도 ‘획일화된 경쟁’이 아니라 ‘자율성’을 강조했다.

“평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평가라고 생각해요. 교과부는 단 하나의 모델을 정답처럼 제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양성의 바다로 항해하고 있는 시대와 엇박자죠. 여기서 바



진보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

로 불행의 씨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에 대한 한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교육 현실이 왜 이런가? 아이들도, 교사들도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것인가?

“더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 열망이 진보 교육감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 오래 잡아 두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막고 있죠. 인권이 강하게 살아 숨 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요.

“아이들이 개정교육과정을 MB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답니다. 교과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켜야 해요. 국·영·수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음·미·체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죠.”

김 교육감이 이런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면서 보수 언론들이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가장 어렵다”는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말처럼, 보수 언론들의 비난은 진보 교육감들에게 압력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새 장관으로 지명된 차관 출신 이주

호가 자사고 지정 취소 등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김승환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인 전북도의회와 일부 교장들도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교육감은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학습 효과, 이것을 항상 연상합니다. 그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간 것을 떠올립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선거에 뛰어들면서 [정부와 보수 진영의 공격을] 예상했습니다. 내가 겪을 일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교육감이 되면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다짐했죠.

“[전교조와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여야 합니다. 진보교육감도 때로는 엉뚱한 타협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교조가 견제해 줘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의 색깔이 바래지 않도록.”

실제로 김 교육감 당선의 일등공신인 8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진보교육감 지지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과 견제·비판 구실을 수행하려고 다시 모임을 시작했다.

진보교육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진보교육감에 보내는 대중의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현실의 시험대 앞에서 벌써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권의 두 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광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 집단 거부 사태가 일어난 학교들을 감사하고 그중 한 학교(영등포고)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대체학습 허용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이었다. 비록 일제고사 당일 오전에 대체학습 허용이 “시험 선택권 부여를 뜻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어쨌든 대체학습 허용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이었다.

광노현 교육감의 영등포고등학교 교사 징계 방침은 일제고사 반대라는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학습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과도 완전히 모순된다.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은 광노현 교육감이 진보운동의 대변자가 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회피한 채 의미 있는 교육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대중운동을 고무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억제하면서 진보적 교육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엘리트주의적 공상일 뿐이다.

개혁의 동력

광노현 교육감의 최근 행보는 살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비판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민병희 교육감이나 김승환 교육감의 진보적 행보는 분명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추진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 개혁의 진정한 동력은 대중운동의 힘이다. 보수파들의 반발을 뚫고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대중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다.

현 정치 상황은 진보진영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다.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지만 이것은 민주당의 궤퇴적인 모습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결코 공고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여전히 높고 경제의 불안정성도 크다. 따라서 집권당 내 분열은 계속될 것이고 지배자들 간의 갈등과 충돌도 커질 것이다. 이런 조건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시기는 진보교육감이 전혀 없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중반이었다.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진 교사들의 치열한 투쟁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교육 투쟁의 활성화는 교사뿐 아니라 노동계급 투쟁의 전반적 고양 속에서 이뤄졌다.

오늘날 교사들의 자신감이나 노동운동 전반의 투쟁력이 당시처럼 높지는 않다. 하지만 촛불항쟁을 포함한 정치 투쟁들과 지난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으로 자신감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맹렬한 탄압으로 크게 위축된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지속할 것이다.

우파들은 대중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계속해서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들을 흠집내고 체제에 순응하도록 위협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우파의 공세 앞에서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을 분명히 방어해야 한다. 동시에 이 교육감들이 우파의 공세에 굴복해 불필요한 타협을 하거나 대의를 배신하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광노현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을 우파 공격에서 방어하지 않거나 두 교육감에 대해 무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것 모두 피해야 한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혁신학교 실험 같은 교육 혁신 운동은 교원평가,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교육과정 개편 등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맞선 정치적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교육을 왜곡하고 짓누르는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투쟁이 없다면 새로운 실험은 단명하거나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진희

차상철 전북지역 전교조 활동가 인터뷰

“지지, 견제, 투쟁이 모두 필요”

기자는 지역 활동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전교조 활동가인 차상철 전 김승환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사무총장(전주 효정중 교사)도 만났다.

“진보교육감 당선에 새로운 변화를 일궈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기뻐했습니다. 기대가 대단합니다. 잘 해야 해요, 정말.”

차 전 사무총장은 김 교육감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업무 판단력도 뛰어났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교원평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육부에서 협상 제의가 들어오자 보류했어요. 일제고사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의 출석처리 문제에서도 실수가 있었죠.”

차 전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진보 교육운동과 전교조의 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에게 마냥 기대면 안 됩니다. 서로가 상호 보

완의 힘을 갖고 가야지요. 힘을 줘야 할 때는 힘을 주고, 견제해야 할 때는 견제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초로 전교조 집회에서 연설했던 교육감이다. 이달 천안에서 열리는 전교조 집회에서도 김 교육감 연설이 예정돼 있다. 차 전 사무총장은 “김 교육감이 집회에서 연설했을 때 참가한 교사들이 엄청 기뻐했죠” 하고 말했다.

이렇게 진보 교육운동에 참가

한 사람들을 고무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진보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실일 것이다.

아래로부터 대중의 압력과 항의 행동이 진보교육감을 방어하고 경쟁교육 정책에 맞서는 데 실질적 버팀목이 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은 진보 교육운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는 대중적 여론과 힘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한 가스 안전 관리 노동자

도입할 때부터 가스 안전 관련 노동자들이 우려하던 CNG버스가 드디어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압축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땅속에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는 유전에서 뽑아내자마자 운반을 위해서 액체상태로 만듭니다. 액체상태의 천연가스를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LNG를 유조선에 싣고 바다를 건너와 가스공사의 인수기지에 저장해 두고, 다시 기체상태로 만든 다음 배관을 통해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게 됩니다.

기체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냉각과 압축 두 가지가 있는데, 냉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체상태의 가스를 공급받은 말단 사용자(버스회사 등)가 부피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압축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CNG가 되는 거죠.

교묘한

문제는 CNG의 압력입니다. 압력단위로 보통 bar를 사용하는데, CNG버스에 사용되는 압력은 2백~2백50bar입니다. 대략 1백bar 정도의 압력으로 기체가 분출하면 콘크리트 바닥에 글자를 새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폭발사고 동영상을 보면, 8개 용기 중 한 개가 폭발했을 뿐인데도 버스를 들끓다 놓았습니다.

에당초 CNG버스는 환경부 주도로 도입돼 2001년부터 본격적인 운행이 개시



8월 9일 폭발한 CNG버스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안전보장 못하면 CNG버스 운영을 거부하겠다”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단위 : 대)				
국가명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인도	693,095	680,380	12,000	715
이탈리아	587,577	584,577	2,000	1,000
중국	500,000	320,000	150,000	30,000
미국	100,000	86,500	11,000	2,500
러시아	100,000	57,000	8,000	35,000
한국	28,841	1,183	26,900	758
프랑스	12,450	9,500	2,100	850

됐습니다. 이것을 환경부가 주도한 것은 CNG의 위험성을 친환경성으로 무마하는 매우 교묘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명분을 댔지만, CNG버스의 도입은 경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우위를 누리기 위한 결정이었고, 그 위험부담은 오로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몫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나라의 천연가스 버스 보급대수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표를 보시면 CNG자동차가 주로 후진국이나 개도국

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CNG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G버스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CNG를 담은 용기 때문에 제기되는데, 우리 나라는 규제완화를 내세워 용기에 대한 정기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종전 자동차검사소에서 병행해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지만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문제는 용기와 부품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압력이 생활공간 내에 있어도 무방한가 하는 판단은 인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용기의 위치가 차바닥이나 차옥상이나 하는 논의는 발목을 다칠 것이냐 머리를 다칠 것이냐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 집단수용을 위해 지어 놓은 아파트를 마치 현대적 주거문화인 양 선전하다가 맥없이 무너져 버려 수십 명이 사망한 와우아파트 사건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파트나 버스나 노동력 재충전과 공급을 위한 광의의 생산수단이 될 것인데, 시대에 부합하는 품격을 갖춘 생산수단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지 않을까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폭발의 공포를 안고 직장에 가야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CNG는 공업용에 국한하는 것이 옳습니다. CNG를 생활공간으로 들여온 것은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었고, 이 문제 역시 자본과 노동의 싸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진보’ 분철은 대중 기만용 위장술

6·2 지방선거에서 반MB 정서로 반사이익을 얻은 민주당이 고작 한 달 만에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2.4퍼센트 밖에 안 된다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인물들은 대체로 개혁적이지도 않았고 광주에서는 색깔론을 들고나와 민주노동당의 등에 칼을 꽂았다.

선거 패배로 위기 의식이 커지자 민주당은 ‘진보’ 카드를 내놓았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너도나도 ‘진보’를 말하고 있다.

대중이 민주당의 정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개혁을 바라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하다.

그러나 이들의 ‘진보’는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술 같은 것이다.

복지 개혁

물론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복지 확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자본가들도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년 뒤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이 무지하고 허약해서는 안 된다. 자본가들의 용어법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마저 복지국가를 내세울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요구에서도 드러나듯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이다.

이런 복지 개혁을 하려면 자본가들의 이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한다. 그런데 시장의 앞날이 불안정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본가들이 이에 격렬히 저항하기 마련이다. 자본가들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이런 저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경험이 정확히 그랬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에 복지를 조금 늘리면서 그 재정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삼모사식 복지를 시행했다. 이것이 ‘생산적 복지’와 ‘참여 복지’의 실체다.

지방선거 직전에 민주당이 내놓은 ‘뉴민주당 플랜’도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장에 더 무게를 뒀다. “우리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것”이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니다. 서구의 낡은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인 이성남·최영희 등은 노동자들 등치는 데 혈안이 된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를 키우고 보험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동영은 “IMF에 굴복”하고 “양극화의 주범”이 됐으며 반성문을 썼다. 물론 그것은 정동영 개인의 “용기” 부족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민주당의 존재 기반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서구 복지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본가들의 격렬한 저항을 좌절시키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거대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민주당에게는 이런 운동을 건설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 운동이 자신들을 집어삼킬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복지는 계급투쟁의 산물이고 따라서 자본가 계급 정당한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진보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사IN>과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신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발끈하며 바뀐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직후 준설토 적치장을 내주지 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호기로운 모습에 견주면 최근 민주당의 ‘금강 대안’ 등은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도 이를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대안을 접하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4대강 사업 저지, 반대의 입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사실 4대강 사업을 하나하나 쪼개 금강 따로, 낙동강 따로 대안을 만들고, 보는 안 되고 준설토는 어느 정도 된다는 식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다” 하며 민주당과 계속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적 환멸의 대상이 된 민주당에 진보의 색깔을 입혀 줘 진정한 진보를 가져올 계급투쟁을 무디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최근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후퇴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앞서 지적한 민주당식 ‘진보’를 합리화해 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타협의 여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천정배는 솔직하게 타협의 필요성을 시인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는 오래전부터 흔들려 왔다.

지난해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지만 민주당은 이 둘을 비판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박준영을 민주당 후보로 다시 공천했고 당선한 박준영은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에 추파를 던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한 진보를 가져올 계급투쟁을 약화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진보는 바로 민주당이 진정 두려워하는 계급투쟁의 고양 속에서 이뤄진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진보 정당이라면 민주당의 ‘진보’ 분철을 벗겨내고 대중 투쟁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장호중

4대강 심판 선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표리부동의 극치다.

민주당은 이미 집행된 예산 문제나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 등을 핑계로 타협하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 이정무 편집국장의 지적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밀어붙이기 앞에서 “과격 행동과 투항이 아닌 ‘모수’는 없다.”

대중운동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계속 민주당의 손을 붙잡고 매달린다면 민주당의 후퇴는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전체의 사기를 꺾어먹을 것이다.

민주당에 독립적인 반MB,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장호중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경험을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 참가자는 한 달 동안 달걀 60개를 먹었다. 유일한 단백질 보충원이기 때문이다. 값싼 단무지는 매끼 반찬으로 올라왔다. 정부가 정한 4인 가구 한 끼 식비 1천7백 원에 맞추다 보니 참가자들 체중이 2~5킬로그램 빠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20년 만에 아토피가 재발하기도 했고, 한 참가자는 몸에서 늘 곰팡이 냄새가 났다. 친구는 한 달 동안 두 번도 못 만났다. 체험에 참가한 안성호 씨는 “고립감 때문에 내가 사회적 식물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먹고 자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험이자 사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수준의 지원도 아까워 어떻게 해서든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줄이려 한다. 절대빈곤 속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정부 통계만으로도 4백만 명이 넘는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다는 데 있다”고 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수급 대상인데 “이 기준이 낮다 보니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제도로

포괄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특히 실제 부양을 받지 않아도 최저생계비의 1백30퍼센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 그 정도 소득으로는 본인들도 살기 힘든데, 부모를 부양한다고 간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국가의 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최예륜 사무국장은 “심지어 압류된 자동차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런 “엄격한 재산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노재욱 씨는 “지금 제도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한다.

빈곤의 악순환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10년 된 봉고차가 있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봉고차 모녀’를 ‘친서민 쇼’에 이용했다.

5천 원짜리 반팔 티셔츠 두 장으로 2년, 겨울 코트 한 벌로 10년을 버티라는 황당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바꿔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료는 아예 제외돼 있다. 가난한 사람은 휴대전화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가 가난한 사람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73.6퍼센트나 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명박도 “대기업은 몇천 억 이익 냈다고 하는 데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역겨운 ‘친서민’ 말잔치는 그만하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해야 마땅하다.



박건희

21세기 달동네 ‘장수마을’ 이명박은 빈민층을 “사회적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한다.

점수 낮은 대학 다니면 학자금 대출도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 30일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취업률 등으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퍼센트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하위 15퍼센트 안에서도 더 낮은 등급의 대학은 등록금의 3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앞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할 때 불리해지는 셈이다. 교과부는 이런 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대출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덕분에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 대학 당국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학 당국도 학자금 대출의 수혜자라 주장한다. 따라서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그 불이익을 학생들이 지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안은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의뢰로 이 안을 연구·발표한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잘 가르치고 재정운영이 건실한 대학에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제도의 진정한 목적을 밝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뜰이나 심각한 대학 서열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구조조정 추진이 더욱 손쉽게 될 것이다. 대학 당국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려 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까지 경쟁 강화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높이고 싶다면, 진보진영이 이제껏 주장해 왔듯이, 살인적 등록금을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 예산을 늘려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빚을 내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김지윤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잔인한 ‘반서민 정책’이다.

게다가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과 지하철, 택시 요금 등을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그야말로 ‘물가 폭탄’ 때문에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유도의 필요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눈먼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의 부담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공공·운수 부문 노동자들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국가 부채 위기의 원인은 부자갑제와 무리한 4대강 사업,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에 있는데도 이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한편 우파 언론들은 ‘신의 직장’, ‘고임금’ 운운하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한다.



사진 출처: 청와대

‘편안한 국민생활’? 공공요금 인상,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등 노동자·서민들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그러나 “물가가 인상됐음에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명목 임금조차도 삭감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원의 10~15퍼센트를 줄”이는 고통 속에 있다.

갈라치기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맞닿아 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산업구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와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둘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하반기 주요한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상수 집행위원장은 “일부 공기업 노동자들이 요금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영업 적자를 메워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수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서 생겨난 적자를 요금을 인상해 메우는 것은 해결책이 못 된다. 부자갑제와 반환경적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와 공공요금 인상 반대를 같이 내걸고 싸우는 것이다.

이영일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6호(2010년 여름)

가격 : 16,000원

문의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초점〉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_ 김하영
유럽의 위기와 저항 _ 알렉스 캘리니코스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_ 최규진

〈특집 1: 경제 위기와 중국 모델〉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_ 이정구
‘중국 모델’을 둘러싼 최근 좌파들의 논의 _ 김용욱

〈특집 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_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대 진보사상 조류〉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존 롤스 (정의론) 읽기 _ 최일봉

〈시리즈 기획 한국경제2〉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_ 강동훈
〈마르크스주의와 역사〉
한국전쟁, 누구의 전쟁인가? _ 한규한

〈서평〉
노회찬 외, 《리얼 진보》 _ 정병호
키어런 앨런,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_ 이현주

일라딘, 에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홍수로 난민촌에 몰려든 파키스탄인들 파키스탄 정부와 서방 정부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희생자들.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유리 프라사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파키스탄을 휩쓸고 간 홍수는 1천3백만 명 이상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미 미국과 파키스탄 군이 수행해 온 “대테러 전쟁”으로 말도 못하게 파괴해진 상태다.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마저 홍수로 잃은 사람들은 이제 진흙탕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파괴된 탓에 완전히 고립돼 있다.

스와트 계곡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최대 60만 명에게 아직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파키스탄 탈레반과 군대 사이의 치열한 교전을 피해 난민촌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신드 주의 하이데라바드 시나 편자브 주의 무자파르가르 시 같은 대도시들도 제방이 붕괴된 강과 운하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수백만 명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구호 관계자들이 다급하게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던 이번 주 월요일 [8월 9일]에도 유엔 구호 요원들은 기본적인 구호 물자 대부분이 부족한 실정임을 토로했다.

깨끗한 식수, 식량, 천막용 비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얼굴 한번이라

도 비치는 경찰관이나 정부 관리 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물에 잠긴 노우세라 칼란 마을에서 온 사기르 칸 씨의 증언이다.

“이제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정부 관리가 있다면 그는 돌맹이를 맞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껏 파키스탄에 아낌없는 군사적 지원을 해 준 서방 세계가 인도적 지원에는 인색하게 굴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탈레반 소탕 작전에 동참하는 대가로 미국한테서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주에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재난 구호 기금으로 애초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고작 2천5백만 달러로 늘렸을 뿐이다.

절망적

시카르푸르 시 출신의 이재민인 만주르 아흐메드 씨는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라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홍수가 닥쳤을 때 죽었다면 그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비참한 처지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아직도 못지 않은 비에 온몸이 젖은 채로 추위에 떨면서 전날 밤을 보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은 자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피해 복구에 앞장서야 할 국가 수반이 자리를 비워 수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후원을 받는 자르다리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해 캐머론 총리에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변함

없이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느라 바빴던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장마철은 해마다 있으며 1973년 이후로 큰 홍수를 열두 번이나 겪었지만 아직 기본적인 수해 방지시설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주에 전력수자원부 관리들은 “많은 [시설 건축] 프로젝트가 서류상으로만 있으며 실제로 짓는 시설들의 품질도 수준 미달”이라고 시인했다.

세계에서 7성급 호텔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지배계급이 파키스탄의 재난을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그로 말미암은 엄청난 인명피해 때문이 아닌 듯하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는 “극단주의자”들이 이번 사태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를 보도했다.

이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급진 이슬람주의 정당들의 외곽 단체로 의심되는 자선 단체들의 활동이다.

“우리는 민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급진 이슬람 정당인 자마트 에 이슬람의 신드 주 대표 아사둘라 부토의 말이다. “우리 민중의 삶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파키스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엘리트들이 자국 빈민 수백만 명을 참담한 고통과 역병 속에 방치하고 있는 지금, 참다 못한 파키스탄 민중들이 이 친미 정권에 반기를 들까 봐 미국이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경록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국경 월경

유엔군의 무능과 편파성

8월 3일 레바논군과 이스라엘군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와 사격 시야를 확보하려고 나무를 베었고 레바논군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 “국경”은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이 재앙으로 끝난 후 유엔이 레바논 측의 항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작은 충돌은 중요한 점을 보여줬다.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력 충돌을 막는 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레바논을 침략해 민간인을 1천 명 이상 학살한 이스라엘의 호전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유엔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엔군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저항세력인 헤즈볼라의 세력 확대를 억누르는 데 있다. 유엔군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서방에서 온갖 흉악한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가만두면서 헤즈볼라에게 무기가 유입되는 것만 감시한다.

유엔군은 레바논을 순찰하면서 “수상한 활동”을 하는 레바논인들을 무차별 검문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최근 유엔군이 남부 레바논 지역을 정찰하던 중 현지인들한테서 돌과 달걀 세례를 받기도 했다.

김용욱

레바논 노동자들의 공장 폐쇄 반대 투쟁

레바논의 북부 도시 아카르에 있는 퓨처파이프 노동자들이 7월 12일부터 공장 앞에서 공장 폐쇄에 항의하는 연좌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 경영자는 심각한 적자 때문에 돈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가 적자를 보기는커녕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퓨처파이프는 지난달 미화 1백만 달러짜리 기계를 구매했고 주변 아랍 국가에 분점을 열었다.

노동자 1백20여 명은 경영진의 거짓말에 항의하면서 공장 정문 앞을 점거하고 경영진이 공장 장비를 빼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조를 짜서 3교대로 공장 문을 지키고 있다.

회사 측은 구사대를 무려 1백여 명이나 조직해 공장을 지키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공장을 운영할 돈과 능력이 없다는 말이 순전히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한다.

김용욱

한국도 2007년 동명부대를 파병했다. 한국 파병군은 뭔가 다를 거라 생각지 마시라. 동명부대의 한 대위는 〈연합뉴스〉에게 “하루에 체크하는 차량이 1만 5천 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차량은 이스라엘 차량인가? 전혀 아니다. 전부 출퇴근하며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레바논인들의 차량이다.

따라서 평범한 레바논인이 ‘막상 테러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스라엘인데 왜 중무장한 한국 장갑차가 기관총을 겨누 채 자기 차량을 검색할까’하고 의문을 품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최근 동명부대 부대장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불법 무장세력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 자는 전쟁을 시작한 쪽이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이스라엘에 맞선 헤즈볼라의 저항이 대다수 레바논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을까?

언론들은 동명부대에 관해 온갖 낯간지러운 보도를 했지만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그 뒤의 미국과 서방) 편을 드는 점령군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를 돕는 상황에 내던져져야 하는가? 동명부대는 당장 철군해야 한다.

김용욱

식량 투기—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마크 토머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투기꾼들이 다시 한 번 식량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빈민을 기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밀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거의 50퍼센트 뛰었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러

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상되는 밀 수확량 하락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은 올해 말까지 곡물 수출을 금지했다. 밀 가격 폭등은 벌써 옥수수 등의 다른 작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밀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미국은 올해 풍

년으로 밀 비축량이 늘기까지 했다.

실제로 미국 농부들은 밀 3천만 톤을 처분하지 못한 채 쌓아 두고 있다.

전 세계 곡물 비축량은 5억 2천8백만 톤으로, 30년 만에 가장 낮았던 2007~8년의 비축량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06~8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투기꾼들은 앞으로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2008~9년의 막대한 정부 구제금융 덕분에 살아난 헤지 펀드와 은행들이 이제는 다시 굶주림을 이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폭등하고 있는 것은 단지 밀 가격만이 아니다.

동물 사료로 쓰이는 보리 가격도 6주 만에 갑절로 뛰었다.

이에 따라 이윤을 보존하려는 식량 생산자들이 육류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커

졌다.

투기꾼들은 이 밖에도 우유, 커피, 코코아 등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식량마저 이윤을 위해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광기 어린 자본주의의 논리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굶주리게 된다.

번역 천경록

지난 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징계 문제를 다룬 지난 호(〈레프트21〉 37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심 전 대표를 방어하고 나섰다.

그러나 심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를 사퇴하고 참여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계급연합에 이바지한 것으로, 진보신당의 규율뿐 아니라 독립적 노동계급 운동의 원칙과 규율을 어긴 것이다. 규율을 형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원칙의 자연스런 발로, 원칙이 몸에 밴 사람들의 자연스런 습관으로 이해한다면 말이다. 심 전 대표는 징계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다.

진보신당의 심 전 대표 징계 소동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것은 심 전 대표를 조금이라도 방어할 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진보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보인 혼란과 동요와 우경화가 하도 심각해 누가 누구를 단죄하기도 낯뜨거운 지경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지도부는 ‘5+4 협상’에 참가했다 탈퇴했고, 부산시당 등이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는 것을 묵인했다.

김문성 기자가 “심 전 대표의 중도 사퇴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잘못”이라면 서도 기본적으로 그를 방어하는 혼란을 보인 이유는 이 문제를 전적으로 진보대연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성 기자는 진보대연합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잣대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 진보신당 내 독자론에 맞서 심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데로 나아가듯 하다. 심 전 대표의 후보 사퇴로 촉발된 ‘연합



유시민과 약속하는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그의 중도 사퇴는 독립적 노동계급 운동의 규율 위반이라는 점을 〈레프트21〉은 꿰뚫어 봐야 했다.

정치” 논쟁이 “반MB 정서를 어떻게 진보 쪽으로 끌어올 것이냐 하는 과제와 연관”돼 있다고 의의를 부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심상정 전 대표는 “진보연합”이라는 연막 아래 실제로는 인민전선(계급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진보정치를 감싸고 있는 협소함과 관성을 넘는 몸짓”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자유주의 세력인 참여당 일부와의 연합을 뜻한다(“새 진보정당” 추진).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때 자민통 경향을 열우당 2중대라고 비난하며 분당을 정당화했는데, 이제 심 전 대표는 열우당의 적자들과 함께 새 중대를 만들자고 한다!

좌파 신문은 연막 아래 숨어 있는 진실을 들춰 내야 한다. 이 점에서도 김문성 기자가 심 전 대표를 진보정당 분열의 무고

한 ‘희생자’처럼 보이게끔 서술한 것이 부적절했다. 심 전 대표는 김문성 기자가 그리고 있듯이 진보정당의 분열로 진보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거센 사퇴 압력에 직면해야 했던 무고한 한 진보 후보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노동당 분당을 주도한 책임자다.

진보대연합을 원칙으로 격상시키고 그 잣대로 모든 것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변혁적 입장에서 하나의 전술로서 진보대연합 문제를 다뤄야 한다.

만약 진보대연합에 원칙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현실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크게 사기가 떨어지거나, 실제로는 인민전선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진보대연합” 논의에 큰 기대를 걸고 스스로 발목 잡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김하영

오쉬노 부대 파병

누구를 위한 ‘국가브랜드’ 높이기인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3백여명 규모의 한국군 오쉬노 부대가 활동 중이다. 이명박은 ‘국가 브랜드’ 운운하며 파병을 정당화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 나라이므로 미군·나토군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자동차나 휴대폰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윤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초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 26퍼센트나 판매가 늘어 판매 성장 1위를 기록했고 삼성반도체는 국제시장 점유율 40퍼센트로 업계 1위다. 삼성 휴대전화는 경쟁 업체 대비 성장률 1위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률은 제자리 걸음이고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 정부 통계상으로도 8.3퍼센트를 기록했다. 이것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

을 보여 준다. 이명박은 “봉사정신을 갖고 국력에 맞게 국제 기구에 진출하고 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현대·삼성 같은 기업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가 간 군사경쟁에서 우위에 서려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2백41억 달러를 군비에 쏟아부어 군비예산 규모 세계 12위의 중무장한 국가고,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파병을 하는 나라다.

이것도 모자라 자국 청년들을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총을 겨누는 침략 전쟁에 동참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지배자들이 말하는 파병을 통한 ‘국가 브랜드’ 높이기는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준현

한 청소년이 사회주의자가 되기까지

지난 5월 7일 저는 시험이 끝난 후 집으로 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고 쓰여 있는 신문을 판매하면서 “기업 광고·후원을 받지 않는 신문”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시험이 일곱 번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저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한 번 탐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서관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을 빌려서 읽고 있는 상태였고 그날도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 다. 《자본론》은 어려워 서 상권을 절반쯤 읽었을 때 막힌 상태였습니다.

왼쪽으로

어쨌든 〈레프트21〉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조금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신문을 판매하던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고 우연히 시작된 이야기가 한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우익이었습니다.(중학교 때는 촛불시위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현실이 제가 생각하던 학교의 이데아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도서관에 있던 〈인권〉이나 〈한겨레21〉, 〈시사IN〉, 〈판지일보〉 등을 읽으며 점차 왼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제 경험이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사람들의 의식이 생활 조건이 바뀔에 따라 변한다’고 주장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싫어 했지만 아직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지지했습니다.(그러나 노무현을 지지하지는 않았습

니다.) 여전히 〈조선일보〉의 잔재가 머릿속에 남아 민주노동당은 왠지 ‘맑스주의자로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집단’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레프트21〉을 읽고, 여러 가지 소책자들을 더 읽으면서 왜 민주당은 계속 배신하는지에 대한 저의 의문이 풀려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노동자 투쟁과 관련한 기사를 많이 다루는 것이 좋았고, 그렇게 신나게 이명박을 두들기는 신문은 처음 보았으며,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웹사이트의 로고가 좋아서 저에게 신문을 판매하고 토론 상대가 돼 줬던 다함께에 가입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인간관계에 염증이 난 저는, 저보다 대여섯 살이나 많은 다함께 회원이 저를 ‘영민 씨’라고 부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입하고 한 달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치열하게 사상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사민주의는 가능한가?’와 ‘신기술 개발로 얻는 이익은 오직 잉여가치인가에 대해 공공거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쉼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독후감을 쓸 때, 쉼페터의 사민주의적 주장을 비판하려고 노력하면서 의식이 개혁주의에서 변혁적 사회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다함께가 주최한 ‘맑스즘 2010’은 저에게 매우 유익한 축제였습니다. 맑스즘의 백미라는 청중 토론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 다. 저도 청중토론에 참가했는데, 그 경험은 울렁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레프트21〉과 다함께를 통해 정치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영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1만 명 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

언제는 국내 청년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고용한도를 줄이더니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청와대 대변인 김희정)라고 말을 바꿨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해 온 정부와 보수 언론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한도를 늘리면서도 정부는 체류 기간과 작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등 ‘불법 체류’를 양산해 온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년 이상 일한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고, 고용을 2년 연장할 수 있지만 재고용에 대한



5월 2일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노동자들

모든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다. 조건이 더 나은 작업장으로 옮겨도 불법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이주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 인

정 소속 중인 대법원은 3년 6개월째 심리만 하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거듭 단속해 추방했다.

정부는 6월부터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라는 미명 하에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본가들의 필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범죄자·테러리스트라며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비리, 추문, 내부 분열로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시도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임준형

민병희 진보교육감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지지한다

나는 지금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를 바라고 있음에도, 강원도에서는 지역 ‘명문고’ 출신 인사들과 보수진영의 반대로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진보적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고교평준화를 내 걸면서 희망이 생겼다. 민 교육감은 2012년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고교평준화추진단’을 구성했다.

최근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원본부가 민 교육감의 도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와 고교평준화를

추진을 비난했고 지난달에는 지역 ‘명문고’ 총동창회장단이 민 교육감을 만나 노골적으로 고교평준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고교평준화=하향평준화’ 논리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들은 ‘고교평준화=하향평준화’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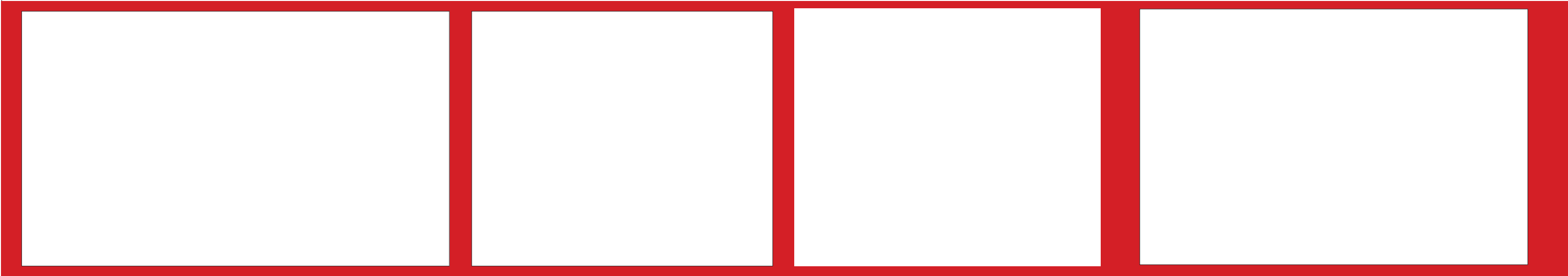
지역 ‘유지’와 교육관료, 단위학교장 상당수가 지역 ‘명문고’ 출신인 탓에 고교평준화 반대 압력이 큰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8·8개각에서 MB교육의 쌍크뱅크이자, KDI연구원 시절부터 ‘차별교육’을 정당화하고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데 열을 올렸던

이후호가 교과부장관이 됐으니 어려움은 더 클 것이다.

그럼에도 민 교육감은 고교평준화가 “도민과의 약속이자 공약 실천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적극적으로 고교평준화 추진 의사를 밝혔고, 고교평준화 대비를 위해 단위학교별 교육과정과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민 교육감 취임 후 강원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곽대진



레온 트로츠키 사망 70주년

트로츠키의 삶과 혁명적 유산

1940년 8월 20일 스탈린이 보낸 자객 라몬 메르카데르가 트로츠키의 머리를 피켈(등산용 도끼)로 내리쳤다. 트로츠키는 숨을 거두며 아내에게 “나타샤, 당신을 사랑하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동지들에게 전해 주시오, 나는 제4인터내셔널[트로츠키가 이끌던 국제 혁명 조직]의 승리를 확신하니 전진해 나가기를.”

인류 해방을 꿈꾼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렇게 숨을 거뒀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던 트로츠키는 그해 초에 미리 유언장을 써 뒀다.

“의식을 깨친 이래 나

는 43년을 혁명가로 살아왔다. 그중 42년은 마르크스주의 기치 아래 투쟁해 왔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런저런 실수를 파하려고 노력할 것은 물론이지만, 내 인생의 큰 줄거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늘날 그것은 나의 젊은 시절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 나는 밝은 녹색의 풀들, 맑고 푸른 하늘, 반짝이는 햇빛을 본다. 인생은 아름답다. 미래 세대는 모든 악과 억압, 폭력을 잊어 내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자.”

1879년 러시아에서 유대인 부농의 아들로 태어난 트로츠키는 10대 후반에 일찌감치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것”이라며 혁명가의 길을 택했다. 원시적 방법으로 성명서를 만들어 배포하던 이 시기를 트로츠키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한다.

“초라한 켈라틴판[등사기]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종종걸음을 치고 있는 이 젊은 그룹을 만약 누군가가 ‘냉정한’ 눈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몇 세기나 계속된 강대한 국가를 타도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딱한 환상으로 보였을까! 그렇지만 이 딱한 환상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실현됐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905년 혁명이 터졌고 트로츠키는 스물 여섯의 나이에 혁명의 주요 지도자로 떠올랐다. 혁명 과정에서 러시아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등장한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의 의장이 된 것이다. 1905년 혁명은 패배했지만 트로츠키는 그 경험을 통해 연속혁명론을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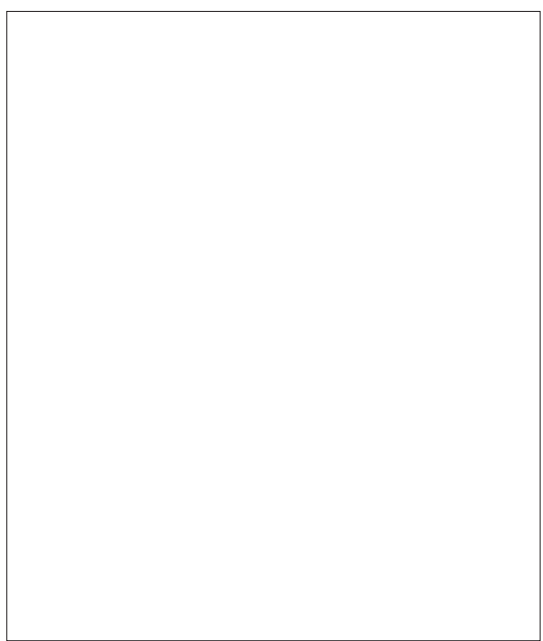
연속혁명론

연속혁명론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트로츠키의 핵심적 기여다. 트로츠키는 독창적이고 대담한 발상으로 이것을 발전시켰다. 당시 유럽의 다수 혁명가들은 단계혁명론에 빠져 있었다. 즉,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한 선진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후진국에서는 일단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였

다. 러시아의 중도주의 정당이던 멘셰비키도 차르(황제)가 지배하는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조건이 무로워지 않았다고 봤다. 먼저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하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너무 앞서 나가서 부르주아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멘셰비키는 1905년 혁명 때도 노동자들이 ‘총을 든 것이 문제였다’고 후회했다.

레닌이 이끌던 볼셰비키의 관점은 다소 달랐다. 볼셰비키는 부르주아지를 신뢰하지 않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이 혁명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수행될 혁명의 성격은 여전히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했다.

“인류의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늘날 그것은 나의 젊은 시절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트로츠키는 이 모든 걸 뛰어넘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었는지 여부를 국제적 시야에서 봤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에서는 그 조건이 무르익었고, 후진국 러시아는 오히려 ‘악한 고리’라고 했다. 불균등하면서도 결합적인 자본주의의 발전 때문에 러시아에는 봉건적 차르 정부, 취약한 부르주아지와 함께 대공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계급이 존재했다.

혁명을 주도할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혁명에서 멈출 리 없다는 게 트로츠키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경제적 후진성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일국 혁명의 틀 안에서는 이 모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따라서 “유럽 노동계급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 노동계급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결국 “혁명은 국민적 무대에서 시작해 국제적 무대에서 전개되고 세계적 무대에서 완성된다.”

1905년 혁명 패배 후 트로츠키는 상당 기간을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채 있었다. 트로츠키의 전기를 쓴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이 기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했다. 트로츠키도 자신이 이 기간에 볼셰비키에 가입해 혁명적 당 건설에 함께하지 않은 것을 “내 생애 최대의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로츠키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선다. 1917년 5월에 트로츠키는 이렇게 연설했다. “부르주아 계급을 믿지 말라! 우리 지도자들을 통제하라! 그리고 우리의 혁명적 힘에 의존하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하라! 세계 혁명의 서곡 러시아 혁명 만세!”

이것은 레닌과 같은 견해였다. 레닌은 자신의 과거 정식을 뒤집고 연속혁명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트로츠키는 볼셰비키에 합류했고 레닌과 함께 주요한 지도자로 떠올랐다.

러시아 혁명은 연속혁명론이 검증되는 과정이었다. 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지는 노동계급의 투쟁에 겁을 먹고 반동 세력의 품에 안겼다.

혁명을 부르주아적 단계에서 멈추려고 한 멘셰비키 등은 반혁명으로 돌아섰다. 10월에 무장봉기를 성공시킨 후 트로츠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은 파산자요, 당신들이 속해 있어야 할 곳

으로 가시오, 역사의 흙더미 속으로!” 이후 트로츠키는 “모든 인간 관계가 협력에 바탕을 두고 인간이 인간의 적이 아니라 형제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트로츠키의 반스탈린 투쟁

그러나 ‘희망의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트로츠키가 연속혁명론에서 지적했듯이 후진국 러시아의 혁명은 선진국으로 혁명이 확산되고 승리한 선진국 노동계급의

지원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실제로 러시아 혁명은 이어서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등에서 혁명의 물결을 불러왔다. 그러나 러시아 볼셰비키처럼 오랫동안 투쟁 속에서 단련되며 노동계급에 단단히 뿌리내린 혁명적 당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노동자 국가가 고립됐고 14개 제국주의 국가가 침공했고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반(反)혁명 백군과의 내전이 벌어졌다. 트로츠키는 백군에 맞서 적군을 창설하고, 적군 총사령관으로서 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혁혁한 공적을 했다. 그러나 내전과 공범 속에 노동계급은 사기저하됐고 해체됐다.

그 자리를 새롭게 부상한 관료들이 매었고 스탈린은 이들을 대변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는 곧치 아픈 국제 혁명 따위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관료들의 이해를 대변했다.

트로츠키의 태도는 단호했다. “앞으로 40~50년 내에 유럽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어떻게 공산주의자인 나의 의무란 말이나?”

트로츠키는 스탈린을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라고 규정하며 스탈린에 맞선 투쟁에 앞장섰다.

레닌 사망 후 권력을 장악해 나간 스탈린은 1929년에 트로츠키를 러시아에서 추방했다. 이 때문에 트로츠키는 터키, 프랑스, 멕시코 등을 떠돌아 다녔다. 트로츠키는 “장애물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결코 혁명이길 수 없다”며 박해와 고난에 맞섰다.

그리고 1925~1927년 중국 혁명 과정,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과정, 1936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노동자 혁명의 가능성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반혁명적 구실을 폭로하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전략·전술을 제시했다.

특히 독일에서 파시즘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트로츠키는 경고를 거듭했다. “파시즘이 승리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소화하지 못한 배설물이 목구멍으로 쏠아질 것이다. 세계의 운명이 앞으로 몇 달간 독일에서 나치의 승패에 달려 있다.”

트로츠키는 공산당의 혁명가들이 사회민주당의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통해 파시즘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스탈린과 독일 공산당은 오히려 히틀러보다 사회민주당을 더 적대시하는 재앙적 정책을 폈다. 트로츠키는 “공산당과 노동계급이 열쇠를 쥐고 있었는데 스탈린은 그 열쇠를 두고 혁명의 문을 잠그려 한다”고 스탈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 트로츠키는 “파시즘의 테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탈린의 관료적 테러가 공산당의 의지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하며 이제 러시아에서 스탈린주의 관료를 타도할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 체제가 노동자 국가의 관료적 변질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여전히 노동자 국가라고 잘못 봤지만 이런 분석은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디딤돌을 놓았다.

필수불가결한 임무

파시즘이 승리를 거둔 뒤 역사적 상황은 “지옥같이 컴컴한 밤”이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득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 트로츠키에게는 네 아들딸의 암살·자살·병사라는 비극까지 겹쳤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역사가 비정상적이고 추악한 비행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주먹을 쥐고 그 역사와 싸워야 한다”며 불굴의 투지를 보여 줬다.

무엇보다 트로츠키는 이 시기에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전통을 보존해 후대에게 물려주는 구실을 했다. 1935년에 쓴 일기에서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현재의 나의 작업은 단지 그 자체의 의미대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혁명적 방법으로 새로운 세대를 무장시킬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고난 속에 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트로츠키는 결국 1940년 암살당했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역사의 복수는 가장 강력한 한 시기집[스탈린]의 복수보다 강력하다.”

오늘날 스탈린주의는 몰락했다. 그러나 트로츠키의 투쟁과 그의 글들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전통을 새 세대의 사회주의자들이 되찾을 수 있게 해 줬다. 이들은 트로츠키가 스물 한 살 때 한 말을 떠올리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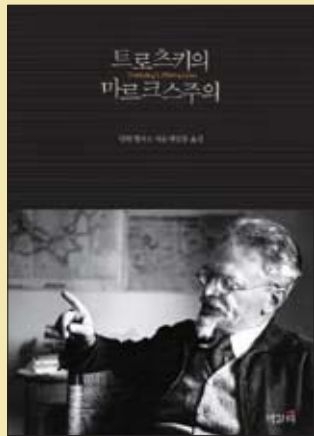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나는 희망을 간직 하리라.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미래를 위해 투쟁하리라. 인간이 강물처럼 흐르는 저 역사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물줄기를 아득다 음과 환희와 행복이 펼쳐진 땅으로 돌리게 될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추천 소책자

에스미 추나라, 《배덕이들은 우리 트로츠키가 아니》, 다함께가 격 : 2,000 원

트로츠키를 이해하기 위해 읽어 볼 책들



이 책은 방대한 트로츠키 사상을 핵심만

《트로츠키의 마르크스주의》

던컨 핼러스, 책갈피

간추려 설명하는 어려운 과제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트로츠키의 사상에 대한 던컨 핼러스의 해설은 간결 명료하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트로츠키의 사상을 찬양 일색이나 비난 일색으로 다루지 않고 공과를 엄밀히 따지며 다뤘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에 트로츠키는 흔히 비비존재로 아예 무시당했고, 드물게 그가 언급될 때도 스탈린주의자들의 비방과 중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옛 소련 블록과 그 사회의 제도들이 붕괴하자 이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극좌파는 거의 다 트로츠키주의의 단체들인 상황이다. 이제 우익과 지배자들은 공격 대상을 공산당이 아니라 트로츠키주의자들로 바꿨다. 트로츠키는 각종 자율주의자들의 왜곡에도 시달린다. 핼러스는 진실을 밝혀내며 이런 공격과 매도에서 트로츠키를 구해내고 있다.

《연속혁명 평가와 전망》

레온 트로츠키, 책갈피

연속혁명론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대한 트로츠키의 기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것이다. 트로츠키는 러시아 노동계급이 비록 전체 인구 중 소수일지라도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이 선행해야 한다는 ‘정설’ 마르크스주의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불균등·결합 발전이라는 도합 것이라고 봤다. 그는 러시아 혁명을 국제 혁명의 첫 단계로 이해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

나라들이 부르주아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쳤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와 똑같은 경로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 전의 러시아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도 있었던 반면 농촌은 사실상 17세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트로츠키는 다가올 러시아 혁명에서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혁명을 지도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러시아 혁명을 국제 혁명의 첫 단계로 이해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

《러시아 혁명사》

전 3권, 레온 트로츠키, 풀무질

지 못하면 1917년 혁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당시의 위기는 사회 밀바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점차 일상의 삶으로부터 유리된 온 왕정을 포함한 최상층에게 미치고 있었다. 트로츠키는 왜 짜르가 군대와 거리에

서의 점증하는 위기를 포착하지 못했는지 뛰어난게 그려낸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강력하고 힘있는 운동을 만들어 냈고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

에서 절정에 달했다.

“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 개입이다. 보통

때는 …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역사

《트로츠키의 프랑스 인민전선 비판》

레온 트로츠키, 풀무질

1930년대 초 세계 경제 위기로 프랑스는 격심한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1934년 2월 6일 집권당이었던 급진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터지자 프랑스 극우 파시스트 세력과 왕당파 무리들이 국회 의사당에 난입했다.

우익의 공세에 직면한 노동총동맹(CGT)은 2월 12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파리에서 만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행동으로 응답했다. 공산당은 10월에 자유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던 급진당에게 인민전선 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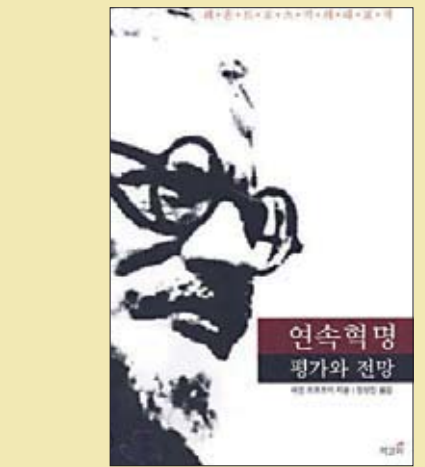
급진당이 인민전선을 제안한 공산당과 사회당은 파시스트들의 위협에 대해서 대중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급진당 정권에

게 반파시스트 정책을 펴도록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1936년 6월 사회당 당수인 레옹 블룸이 초대 인민전선 정부의 수상으로 뽑혔다. 그러나 블룸이 취임식을 열기도 전에 파리의 금속 노동자들은 공장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 6월 초에는 프랑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2백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블룸은 “국민은 인민전선에게 대표권을 위임했으며 우리는 이 대표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려고 했다. 결국 급진당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

급진당은 “더 큰 이유와 더 높은 생산성”이라는 모토로 프랑스 노동자들을 산업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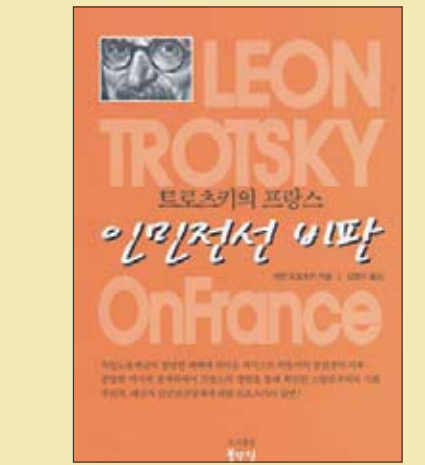
다고 주장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트로츠키의 전망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트로츠키는 이 책에서 자신의 연속혁명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는 … 특수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중이 구질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 자신의 전통적 대표들을 끌어버린 다음 자주적으로 새로운 체제의 기반을 만들어 낸다.”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열쇠였다. 당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당은 혁명 운동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볼셰비키당은 혁명을 성공시켰다.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는 1917년 싸웠던 모든 노동자에 대한 헌사이자 그들의 전통을 잇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전히 귀중한 무기이다.



어로 격하시키려 했다. 나아가 급진당은 프랑스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노동자 운동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1940년 독일이 프랑스 전역을 점령하고 친나치 정권을 세웠을 때에도 프랑스 노동계급은 무기력했다. 이 책에서 트로츠키의 프랑스 인민전선 비판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

김대중 사망 1년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김대중 사망 1년을 맞아 “한국 민주화의 인동조” 김대중의 삶과 정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 자서전>은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죽기 직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호소한 김대중을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정치 지도자로 여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는 김대중의 일생을 관통한 신념이요 가치”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김대중의 정치 역정은 김대중이 민주주의 투쟁에 철저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음을 보여 준다.

김대중의 정치적 한계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등장해 단명한 유약한 장면 정부의 대변인을 했을 때부터 드러났다. 김대중은 ‘자유당과 뭐가 다르냐’며 비판을 받던 궤적죄한 민주당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또, ‘남북 군대의 무장 해제와 외국 철수’, ‘선 통일 후 중립화’ 등을 외치던 혁신 세력의 급진적 주장과 시위를 “정국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 준다”며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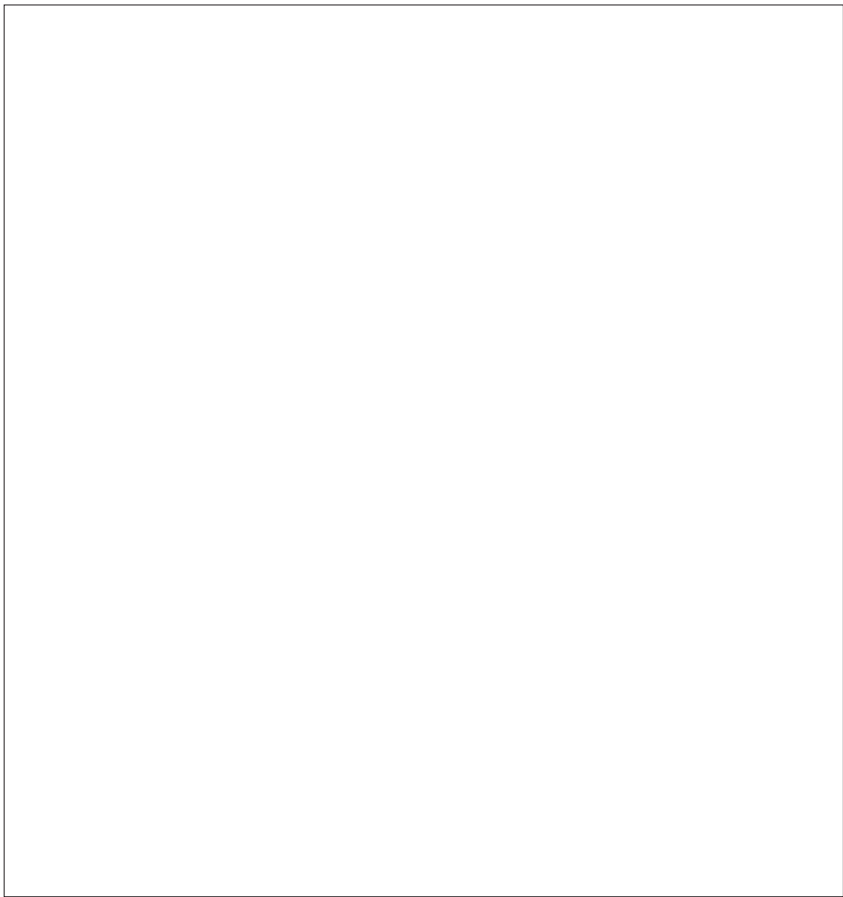
김대중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담을 조건부 찬성했고, 베트남 파병에도 철저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 독재 강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투쟁을 이끌던 야당 강경파를 비난했다.

그러던 김대중이 박정희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야당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다.

1971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열망은 김대중 지지로 표출됐다. 장충단 공원 유세에 백만 인파가 모일 정도였다. 광범한 부정 선거 덕분에 가까스로 승리한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도입하고 김대중을 제거하려 했다.

민주화의 진정한 동력

1979년 박정희가 죽고 ‘서울의 봄’이 찾아왔을 때, 재야 지도자들은 투쟁을 호



김대중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의 상징이었지만 권력을 잡고 나선 민주주의를 역눌렀다.



2001년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던 대우차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경찰

소하는 성명서를 들고 김대중을 찾아갔다. “모든 군인들은 무기를 놓고 병영을 나와라. 모든 노동자들은 해머를 놓고 공장을 떠나라. 모든 상인들은 문을 닫고 철시하라. 모든 국민들은 가슴에 검은 리

본을 달고 장충단공원으로 모여라.”

당시 군부의 재등장을 막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이렇듯 기층 대중의 투쟁이 필요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성명서 내용에 깜짝 놀랐다. “국민들은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며 성명서 내용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대중의 관심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논의되는 것이었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선거를 하지 않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학생들에게 시위 자제를 요청했고, 최규하 과도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전환점이었던 1987년 6월 항쟁 때에도 김대중과 자유주의 야당 정치인들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두려워하고 독재 타도 투쟁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를 주저했다. 여야 연수회담에 매달리다가 군부가 타협책으로 내놓은

직선제 수용으로 운동을 제한하려 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오자 김대중과 자유주의 야당은 노동자 투쟁에 보수적 태도를 보이며 계급적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동자 대투쟁이 김대중 자서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은 그의 계급적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진정한 힘은 김대중과 자유주의 야당이 아니라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야당 지도자에서 지배자로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한 후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했다. 대중의 민주 개혁 열망은 저버리고, IMF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며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등 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김대중은 한때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집권 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좌파를 탄압했다. 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 3년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무려 8백70명이었다. 집권하자마자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해 줬지만, 집권 기간 노동자를 무려 8백92명이나 구속했다. 김영삼 정권 때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이다.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려고 1백60조를 쏟아부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희생만 강요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파업 중인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2001년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던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이명박 정권의 쌍용차 진압에 버금가는 야만적 탄압을 가했다.

김대중은 야당 지도자 시절에도,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된 뒤에도 결코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은 정확히 노동자들의 적이였다.

이런 김대중의 반노동자적 본질 때문에 민주노총은 2001년에 김대중 퇴진 투

쟁을 벌였다.

김대중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다.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고, 실업자와 빈곤층이 산업화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거리는 노숙자들로 넘쳐났다.

‘생산적 복지’의 일환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3퍼센트 미만으로 IMF 이후 급격히 확대된 빈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했다. 현재 빈곤층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이 정부 발표로도 4백만 명이 넘는데, 이 수치는 김대중 정부 때와 절반 다르지 않다.

김대중은 2008년 촛불시위를 우호적으로 언급했지만,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촛불시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 또, 지난해 용산 참사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에도 야만적인 철거가 진행됐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거 양극화도 엄청나게 심화됐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노벨평화상 수상에도 김대중의 지지율은 집권 3년 만에 17퍼센트까지 하락했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핵심은 의회 정치”라고 믿었다. 제국주의에 타협하고 시장경제를 유일한 대안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대중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는 이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은 탐욕스러운 시장과 제국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또 더는 탄압받지도 않고, 기층 민중의 투쟁에 보수적인 자유주의 야당에 의존해선 안 된다.

민주화의 진정한 동력이었고,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쟁취할 잠재력이 있는 노동계급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래야 김대중이 언급한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강철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시장에 내놔다. 정부 지분이 57퍼센트인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자산이 3백25조 원이나 되는 우리금융을 삼킬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합병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M&A(인수·합병) 통해 KB금융을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메가뱅크로 키우겠다”는 MB맨 여운대가 KB 회장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매각 공고가 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합병의 공포에 떨고 있다.

“KB금융그룹은 비만증 앓는 환자”라며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해 구조조정의 칼날을 갈고 있는 여운대가 합병에 나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여운대가 최근 ‘당분간 합병은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메가뱅크가 이명박과 여운대의 지론인만큼 ‘선 구조조정 후 합병’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7월 12일 우리은행 합병에 반대하는 금융노조 집회 합병을 비롯해 민영화 계획에 반대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가 합병에 나선다고 해도 구조조정은 따를 것이다. 자본 규모가 우리금융보다 훨씬 작은 하나금융이 경영권을 인수한다면 정부의 엄청난 특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길 정부 손실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구조조정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의 역사는 노동자 구조조정의 역사였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부실이 드러난 상업·한일은행(합병

후 한빛은행), 평화·경남·광주는행, 우리중금을 합병해 우리금융지주를 만드는 데 무려 13조 원(이자지급액까지 합하면 18~19조 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이 세금은 철저히 기업 살리기에 사용됐을 뿐, 노동자 살리기에 쓰이지 않았다. 은행 부실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낳은 기업 부실과 기업주들의 비리 때문이었는데도, 그 책임은 열심히 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됐다.

은행이 하나씩 합병될 때마다 노동

자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IMF 위기 전에 13만 7천 명이었던 은행 노동자들이 2000년 정리해고 후 7만 3천 명으로 줄었다. 2001년에 우리금융지주사에 편입된 경남은행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잘려나갔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당했다. 우리은행 노동자들은 지난 11년 동안 MOU(경영정상화 이행각서) 족쇄에 묶여 임금 동결과 복리후생 축소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다. 회사가 수조 원의 수익을 내도 성과급 한 톨 받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은행 정상화의 밑바탕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희생한 은행을 고스란히 다시 민영화해 다른 자본가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이것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금융노조는 국내은행간 합병 시 “1만 명 이상의 은행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은행 노조의 주장처럼 이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은행 노조는 합병이라는 방식은 반대하지만 민영화는 지지한다. 그동안 정부의 우리금융 ‘관치’는 은행을 잘 팔아 먹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성과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뭐가 돼도 MOU 하에 있을 때보다 심하겠냐’ 하는 심정”(우리은행 노조 이창희 부위원장)인 듯하다.

그렇더라도 민영화를 지지할 수는 없다. 어떤 방식의 민영화건, 막대한 공적자금 혜택을 받고 노동자들이 살려 놓은 기업을 다른 사적 자본가들이 날로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대량 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금융 노동자들은 그동안 강요당한 MOU 족쇄를 철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인 만큼, 기업 이윤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서민은행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최미진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해야 한다

얼마 전 7·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명박의 정치 위기에서 아무런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며 패배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뿔뜰 뭉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조금치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차명진과 외교부 장관 유명환의 막말이 이어지며 반MB 정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민주당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 기간에 보여 준 무능과 배신, 최근의 동요를 잊지 않았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그 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2.4퍼센트밖에 안 됐다.

상황이 이렇진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정치 거간꾼'처럼 반MB 야권 단일화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는 "[진보정당의] 수도권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이정희 대표의 말과는 달리 참담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외면하고 민주당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동안 서울에서 진보진영의 존재감은 더 희미해졌다. 진보 후보로 나선 사회당 금민 후보는 5백 표도 얻지 못했다. 사회당의 협소한 지지 기반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너무 적은 표다.

자화자찬

물론 민주노동당이 광주 남구에서 민주당과 경쟁해 44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민주노동당은 반MB민주연합 노선을 채택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정치·경제 권력이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 민주당과 단일화하며 후보를 사퇴한 것은 전국적 수준에서 계급 연합 전략이 우선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아류로 보이게 해 광주에서도 감표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한마디 없이 더 강력한



계급 연합 NO, 계급 투쟁 YES 민주대연합의 진정한 문제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노동자 운동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야권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7·28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뒀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야권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술 더 떠 민주노동당이 서울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야권연대의 원칙을 더 깊게” 했고 “국민들이 이제 단결의 주도세력으로 민주



민주당과의 차이가 “작은 차이”일 뿐이라는 이정희 대표

노동당을 주축”했다며 자화자찬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폭넓은 야권연대를 선도해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지만 진보·개혁 대중은 민주당을 마땅치않게 여긴다는 것을 7·28 재선거는 보여줬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전략은 10년 동안 힘겹게 성장해 온 진보 정치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진보·개혁 대중의 정치 대안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침은 노동계급의 진정한 단결을 외면하고 부르주아 자본가 정당에 진보 정치를 ‘종속’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유연한 진보”를 주장하며 “거친 구호나 작은 차이의 정체성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슬그머니 내려놓아 “유연”함을 갖추고 부르주아 야당과 계

급적 “차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동안 우파 정부의 공세, 광범한 반MB 정서를 들어 이런 계급 연합 전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혼란과 분열을 낳았다.

무엇보다 계급 연합 전략으로 말미암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한하거나 노동자 투쟁을 단속·자제시켜야 하는 모순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장이 민주당과의 연대를 위해 노동계급의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1930년대 스페인과 프랑스의 민주연합(당시 용어로는 인민전선)은 20세기 좌파 역사에서 가장 재앙적인 경험 중 하나였다. 당시 두 나라 공산당은 인민전선 내에서 자본가 정당에 정치적으로 종속됐고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는 구실을 했다.

민주당과 ‘공통분모’를 강조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역사적 경험을 되새겨야 한다. 이들은 “야권연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옷자락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이는 노동계급 정당의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노동계급에 내린 뿌리마저 알아지게 만들 것이다.

연막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8월 5일에 ‘최고위원 워크숍’을 열고 “2012년 총선 전에 빠르면 2011년 연말까지 진보대통합을 실현하고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정희 대표도 부쩍 ‘진보대통합’을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대통합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진보대통합 발언은 2012년 계급 연합 전략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연막이거나 좌파의 비판을 피하려는 ‘딥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동안 민주당과 선거연합에 들인 노력의 10분의 1도 진보대통합에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이 벌어져 그 압력 때문에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인민전선 전략에 근거해 우경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는 노동계급 대중의 열망과 지지로 10년간 성장해 온 진보정당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정당과 자본가 정당(민주당)의 차이를 “실개천” 수준으로 전략시켜 놓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하라. 그리고 계급 연합을 위해 노동계급의 투쟁과 요구를 자제시키려는 우경화를 멈춰라.

박성환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진보신당의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가 8월 5일 당 발전 전략(안)(이하 발전안)을 공개했다.

발전안은 진보신당이 창당 후 2년 동안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고, 특히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위상 제고”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변화”와 “청년 세대 전략”으로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국가”와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비전”을 가진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가)” 건설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 발전안을 초안으로 해 전국 순회 토론을 벌인 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9월 5일 임시 당대회에서 당 발전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발전안은 당내 논쟁을 절충한 듯하다.

6·2 지방선거 후 진보신당 안에서는 정체성 확보 실패와 정치적 위상 제고 방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져 왔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직면했던 모순과 난점, 실망스러운 선거 결과가 이런 논쟁을 촉

발했다.

그런데 발전안은 논쟁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기보다는 “창당정신 실현”이나 “진보정치 혁신” 같은 추상적 과제만을 반복하고 있다.

한석호, 장석준, 김정진 등 2년 전 선도탈당파들 일부가 만든 ‘창당정신을 실현하는 당원모임’(창당정신모임)은 “창당정신을 마음으로만 실현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방향은 옳았으나 실천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당정신모임의 주장과 달리 민주노동당과 분리해서 창당할 때의 문제의식 자체에 모순과 난점이 있었다.

진보신당의 리더들은 민주노동당과 분당 직전에 노무현 정부의 배신에 실망해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것이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 ‘민주노총당’이라고 매도하며 분당을 감행했던 것이다. 국가 탄압에 투항하고 조직 노동자 운동과 거리 두기를 하려 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나 비정규직 연대 외면은 비판할 필요가 있지만 진보신당 리더들의 ‘민주노총당’ 비판

은 이런 관점과는 달랐다.

정치와 경제의 분업, 곧 진보정당은 의회 정치를, 노동조합은 경제 투쟁을 담당하는 식의 분업을 더욱 강화하려는 발상이었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협소한 부문주의나 투쟁회피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거공화

이런 시도는 촛불항쟁 때 진보신당이 성장하며 다소 성공하는 듯했지만, 그 운동이 가라앉고 이명박 정부가 반격에 나서는 상황이 되자 진보신당의 성장도 멈췄다.

이때는 대중의 자생적 분출보다는 잘 조직된 좌파가 국가 탄압에 맞서는 상황이 됐는데, 명망가 중심으로 “제도정치에 매몰되고 선거정치에만 온힘을 쏟는 당”(서영표 당발특위 위원)이 이 상황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 사망을 계기로 친노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하자 진보신당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

민주노총 기반과 탄탄한 조직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짧은 정당”이 되기는커녕 스타 정치인에 의존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정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자면서 노동자 운동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적 위상 제고”에 실패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

이 상황에서 심상정 전 대표의 ‘유시민 지지 후 사퇴’가 나왔다. 심 전 대표는 더 우경화한 연합 노선으로 실패를 만회하려 한 것이다.

한편, 발전안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는 비전”을 말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처럼 노동자가 보험료 인상을 수용해 복지를 개선하는 양보안을 “당을 상징할 만한 정책

브랜드”로 삼자고 한다.

결국 발전안에 새로운 게 있다면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을 실현하자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노회찬 대표가 “민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등 진보단체·개인들을 포함한 진보대연합을 제안한 것은 지지할 만하다.

진보신당은 이제 더는 민주연합과 진보연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진보진영의 단결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와 거리 두기’와 양보가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조직 노동계급의 집단 행동만이 자본주의의 이윤 생산에 타격을 가하며 지배자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이 강조하는 ‘비정규직·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과제가 이와 대립될 이유는 없다.

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의 연대와 투쟁만이 이들의 고달픈 현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투쟁이 낳는 사회 변화는 더 많은 비정규직·청년들을 더 급진적 대안으로 끌어당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문성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야 할 교훈들

1백 년 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일병합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욕구 때문이지만, 더 넓게 보면 당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열강 간 경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 과정은 제국주의를 동반했다. 아니 제국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가능했다. 동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에 직면했다. 서구는 아만족들에게 ‘자유 무역’의 미덕을 가르치기 위해 함포를 동원했다.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개방’시켰고, 곧이어 일본은 미국에게 굴복했다.

중국이 굴욕을 당하자 조선은 경악했다. 조선은 강력한 반(反)서구화를 내세우며 전통 체제를 보수해서 대응하려 했다.

조선인들이 서구에 품은 반감은 단지 보수 엘리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반서구 감정이 단지 세계 흐름에 눈이 어두운 무지몽매함이나 편협한 국수주의의 발로만은 아니었다.

당시 ‘문명·개화·개방’이라는 대세가 지금처럼 당시 조선인들에게 자명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서구식 근대화가 야만적이고 잔인했다는 간단한 사실 때문이었다.

이미 조선인들은 중국에서 서구의 ‘근대인’들이 한 짓을 모르지 않았다. 그들이 강제한 자유무역과 시장 경제는 전통적 가내공업을 몰락시켰다. 당시 동아시아를 휩쓴 가뭄 때문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 해골이 들판을 뒤덮었지만, 곡물의 상품화는 전통적인 국가의 재난 구제 시스템을 붕괴시켜 재앙의 규모를 비할 데 없이 크게 만들었다. 태평천국의 난에서 볼 수 있듯이 제국주의자들은 굶주림에 지쳐 반항하는 민중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불균등결합발전

이런 일들은 조선의 개항 이후 특히 일본에 의해서 고스란히 반복됐다. 1894년 동학농민봉기의 주요 요구에 외세 배격과 쌀 수출 금지가 들어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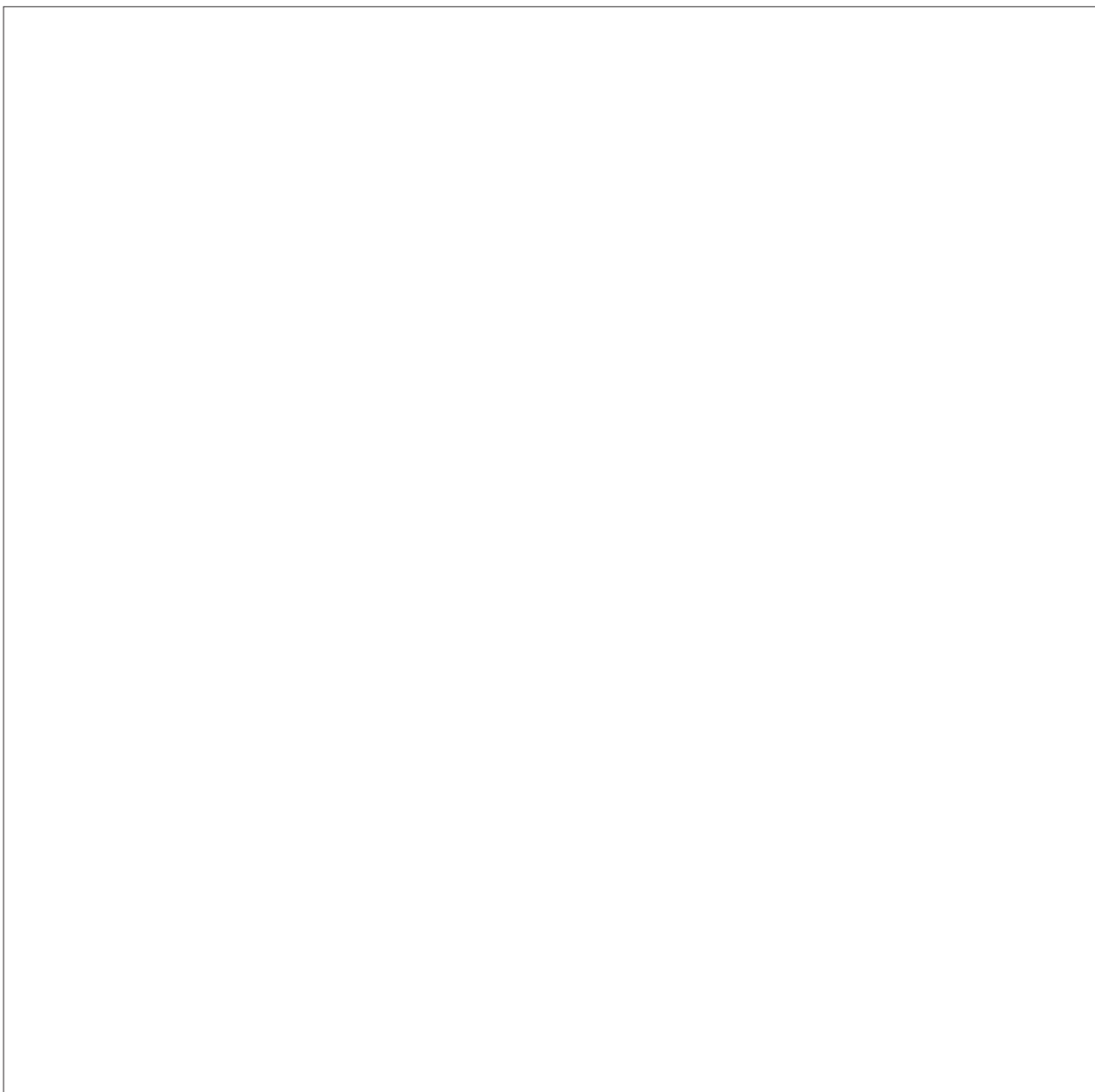
강화도 조약 이후 근대화의 압력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나름으로 대응을 하려 했다. 어느 정도의 근대적 개혁 조처는 피할 수 없어 보였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조지 노백은 트로츠키의 불균등결합발전 이론을 좀더 일반화시킨 바 있다. 그는 결합발전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1) 후진 사회가 선진 문화의 산물을 단순하게 ‘흡수’하는 경우다. 예컨대, 인디언은 사회질서의 근본적 재배치 없이 돌도끼를 철도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철도끼를 가져온 백인들의 문명에 단지 약간만 의존하면 이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후진 문화의 요소들이 선진 문화로 통합된다. 예컨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모피 무역에 뛰어들어 돈이 그 사회로 유입했을 때, 원시 공산제적 관습에 반해 사적 이해관계를 세운다든지, 새로운 인디언 무역상들과 모피 사냥꾼들을 세계 시장에 종속시킨다든지 하는 ‘혁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조선 정부와 온건 개혁파 들은 첫 번째 경로를 원했다. ‘동도서기’, ‘중서체용론’ 등의 논리로 조선 사회의 근본적 개혁 없이 근대의 산물을 도입하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상투를 자르고, 군대에 신식 소총을 도입하기도 했고, 대한제국기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흉내 낸 군주제를



1909년, 일본의 강제병합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항일 의병들

시도했지만,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여러 열강들의 내정 간섭과 군사 개입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이런 미온적 개혁마저 일관되게 추진할 수도 없었다. 브루스 커밍스의 지적대로 “전지(全知)한 천재가 한국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해도 자국의 영토를 겨냥한 그런 쟁탈전의 와중에서는 한국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을 두고 경쟁했던 주요 열강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다. 중국은 전통적 조공체제를 ‘근대화’해서 조선을 실질적인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다.

러시아 역시 동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남하정책에 한반도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하마터면 식민지로 반식민지로 전락할 뻔했던 일본은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태평천국의 난 진압 등 중국 문제에 힘을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 독자적 근대화에 착수할 기회를 얻었다. 신흥 아류 제국으로 등장한 일본은 서구 열강에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했다. 조선은 최적의 먹잇감이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열강의 반열에 오르고자 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조선 정부가 독립을 지키려고 채택한 전략은 이런저런 열강들을 끌어들여 그들 간에 세력균형을 맞춘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곡예였다. 조선 집권층의 각 분파들은 러시아나 중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했고, 급진 개화파는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다.

물론 잠시 열강 간 세력 균형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에 이르는 기간이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에게 혜택을 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조선 정부는 그 대가로 광산, 산림채벌권, 철도 부설권 등 각종 이권을 열강들에게 나눠 줬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 8월 10일 일본 총리 간 나오토는 소위 ‘사죄’를 하면서 정신대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민비가 일본 자객에게 살해되고, 왕은 외국 대사관을 떠돌았다. 심지어 일본은, 1945년에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에게 3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분비물”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급격히 바뀌었다. 이는 중국에서 벌어진 사태의 결과이기도 했다. 의화단의 난을 틈타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자, 영국과 미국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고,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원조를 받아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해 승리했다.

결국, 한반도는 일본이 차지하게 됐고, 열강들은 이를 승인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가쓰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용인했다. 또, 그들이 볼 때 “썩어빠진 동양 문화의 악취나는 분비물”(조지 케넌)인 조선인이 독립하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도 했다.

고종은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열강들

에 호소했지만, 누구도 경청해 주지 않았다. 마치 팔레스타인인들이 유엔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듯이, 고종이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 밀파한 특사들은 무시당했다.

강제병합이 임박하자 저항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안중근은 일본이 동아시아 연대를 배신한 죄를 몰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일본의 침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것은 지방의 일부 양반과 민중이었다. 1908년 당시 일본인들이 추정한 무장 게릴라들의 수는 6만 9천8백32명이었고, 그들과 일본군 사이에는 거의 1천5백 회의 충돌이 있었다.

일본은 이 저항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나서 강제병합을 공식화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조선을 강제병합했다. 그 후 30여 년의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에 수많은 조선인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됐다.

지난 8월 10일 일본 총리 간 나오토는 “식민지 지배가 가져다 준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죄’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8월 15일 제2차세계대전 종전일을 앞둔 시점에서 한 발표인데도 왜 중국에는 사죄하지 않았을까?

며칠 전 간 나오토의 자문 기구인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군사 정책은 더욱 호전적이 될 듯하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일본이 공식적으로 표방한 비핵3원칙을 개악해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한다. 미일동맹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인데, 미국의 핵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해군에 대응해 군사력도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일본은 30년간 유지해 온 잠수함 18척 체제를 개편해, 20척 이상을 보유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하토야마 시절 잠시 빼먹던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 자위대의 공세적 재편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1백 년 전에 그랬듯이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중 하나다.

사실,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이 어느 정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스처는 필요할 수 있다. 자민당 정권 시절 총리 아베 신조처럼 과거 일본의 만행을 옹호하는 행위는 동아시아 주변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미일동맹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비례해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부추길 수도 있다.

반제국주의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 있는 것 같다.

첫째, 제국주의 간 경쟁과 세력균형을 활용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미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생각이나, 중국을 이용해 미일동맹을 견제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특히 한반도가 이들 열강 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둘째, 반제국주의 저항에서 자국 지배 계급이 동맹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1백 년 전 조선 정부든 급진개화파든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의 반외세 저항을 비난하고 탄압하는 데서는 일치했다. 그들의 반란이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반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조선 왕조가 일본군을 동원해 동학농민군을 학살했다. 그들은 민중반란이 외세의 침략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주류 지배자들은 말로는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난하지만, 오늘날 제국주의적인 미일동맹에는 침묵한다. 말로는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지만,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 술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는 행여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누가 될까 봐, 행여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나빠질까 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천안함 사태 이후 더욱 격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 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를 볼 때,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이 더 폭넓게 건설돼야 한다. 이것이 한일병합 1백 년을 되돌아보며 내려야 할 결론일 것이다.

한규한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8월 23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사내하청 비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의 소감이다.

판결을 따르면 현대차에서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투사들이 그동안 구속·해고, 심지어 죽음까지 무릅쓰며 처절하고 끈질기게 투쟁해 온 것이 낱은 성과다.

대법원 판결 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는 정규직화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송성훈 지회장은 “현재 30명 정도가 새로 조합에 가입했다. 계속 가입할 것 같다”고 했고, 전주지회 조봉환 사무장은 “우리는 판결 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이를 동안 20명 넘게 가입했다”며 새로운 분위기를 전해 줬다.

고용노동부는 뻔뻔스럽게도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같은 비정규직 공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지 않



정규직 간사

8월 11일 동희오토 촛불문화제 경찰의 농성장 침탈 등 탄압이 거세지만,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는 계속되고 있다.

는다”며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격분

용역과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후 현대차 본사 맞은편 인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희오토 해고자들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격분했다. 심인호 동희오

토 해고자는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을 조금 고용해서 정규직과 함께 일하면 정규직 대상이 되고, 공장 전체가 비정규직이면 정규직 대상이 안 된다는 해석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제2, 제3의 동희오토를 만들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주들은 이번 판

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2년 이하 비정규직 대량해고, 초단기 비정규직 고용 확대, 부품과 완성차 조립 외주화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러면 정규직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과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 작업장인 현대차지부의 구실이 중요하다. 현대차지부는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2년 이하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해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도부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해고 위협에 직면한 2공장 비정규직들의 투쟁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올해 3월 현대차 전주공장이 보여 줬듯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

급속노조·민주노총도 이런 투쟁과 연대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투쟁이 확대된다면 하반기에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공격에 맞서는 투쟁에서 우리 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모승훈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성향아 동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향아 동지는 2007년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기, 별정직 전환 권고를 받아 복직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2차 해고를 당했다.

이번 판결은 끈질기게 법정소송과 공단 앞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을 지속한 성향아 동지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만든 성과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 아무런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줬다. 공단측이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성향아 동지에게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생떼를 쓰다가 2차 보복 해고를 강행한 것이 파렴치한 짓이었다는 것도 보여 줬다.

하지만 공단은 어이없게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공공노조,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다함께 남부지구, 서조강남노점상연합회, 진보신당 강

남서조당원협의회 등이 함께하는 성향아 동지 지원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홍보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향아 동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투지를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장 성향아 동지를 복직시켜야 한다.

신명희

상지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8월 9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이 17년 만에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 아들을 포함해 옛 재단 측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이 “학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앞세워 구성원들의 의사와 교육 공공성을 강그리 무시한 것이다. 경찰은 교과부 앞에서 부패 재단의 복귀에 분노하며 부동겨 안고 울고 있던 상지대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김문기는 1973년 우연한 기회에 상지대 임시이사단에 포함됐다가 학교를 가로채 비리왕국을 건설한 범죄자다. 부정 입학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강사 채용에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학교 돈으로 부동산 투기, 공사비 폐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폭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용공 조작도 했다. 이 때문에 1993년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쫓겨났던 것이다.



공공노조 간사

8월 9일 교과부 앞 규탄집회 부패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지대 구성원들.

그러나 이명박 당선 이후 김문기 측은 “이미 청와대에 ...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연하게 복귀를 시도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를 막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학생들은 6월부터 수업과 기말고사를 거부했습니다. 5월에는 서울역에서 2천 5백여 명, 6월에는 종각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상경 집회를 했고, 도심에서 유인물도 20만 장 정도 뿌렸습니다. 7월에는

학생, 교수, 직원 50여 명이 여기서[교과부 앞]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고, 한 달 정도 철야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3백40일 정도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습니다.” 이명석 상지대 총학생회장의 말이다.

“위낙 나쁜 놈이기 때문에 교수 학생 교원이 너 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명박 정부와

사분위는 부패한 옛 재단을 복귀시킨 것이다.

사분위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기관이다. 사분위원 중 일부는 부패 사학재단과 유착해 있다. 이번에도 사분위원 강민구가 김문기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보며 광운대·덕성여대·동덕여대·대구대 등 전국의 부패 재단 사학 비리범들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지대 비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강도 높게 싸워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상지대 비대위는 “비리 구제단의 학원 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섭 비대위원장은 “교과부,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고 경고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상지대 구성원들의 말처럼 부패 사학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과 연대는 더 커져야 한다.

정선영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가 단호한 파업과 지속적인 연대를 발판으로 건설사와의 한판 싸움에서 승리했다.

경기중서부 건설지부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임금 인상과 단협 준수 등을 요구하며 6월 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여러 약조건 속에서 파업 대오를 유지했고, 타워크레인 두대를 점거하는 고공농성까지 벌였다.

그 결과 7월 28일 하청업체에게서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과 노조원들을 단협을 준수하는 현장으로 고용한다는 양보를 받아냈다. 다만, 안타깝게도 투쟁 직후 타워 점거를 이유로 세 명이 구속됐다.

건설노조가 원정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7월 30일 전국건설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한 것이 큰 힘이 됐다. 산별노조 강화는 이렇게 연대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더욱이 이 투쟁은 초기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했다.

이명박 정부와 건설자본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체계를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원으로 조직화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건설현장의 주축인 목수·철근 직종의 경우 이미 과반수가 넘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번 투쟁을 끝까지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런 경험이 더 축적되고 확산돼야 한다.

박재순 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여수건설노조

전면파업에 돌입하다

플랜트 건설공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여수건설노조가 8월 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은 임금 5퍼센트 삭감안을 비롯한 각종 개악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 안전화 지급, 임금 체불 때 원청사 직접 지급, 다른 지역 노동자라도 여수 현장에서 일하면 단협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73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일주일간 부분파업을 했다. 이에 밀려 사용자협의회는 5퍼센트 임금 삭감안을 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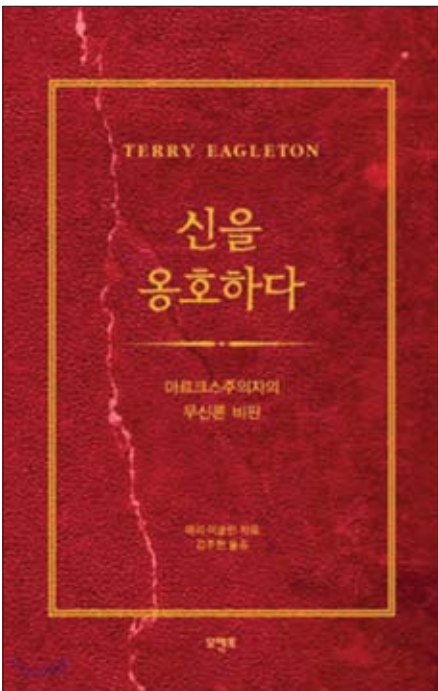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자, 노조는 6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출정식이 열린 여수시청 잔디광장에는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조만간 외지에 나가 일하는 조합원들이 복귀하면 파업 규모는 7천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승현



서평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
테리 이글턴, 모멘토
1만 2천 원, 264쪽

종교에 관한 현재의 논쟁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에서 테리 이글턴은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신(新) 무신론자들 가운데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핵심 인물들의 콧대를 꺾어놓는 것이다. 이글턴은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어 “디치킨스”라고 부른다. 이글턴은 디치킨스 류의 주장에서 두 가지 주된 약점을 꼬집어낸다. 첫째, 디치킨스가 종교를 단지 잘못된 과학적 설명(즉 사이비 과학)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종교의 실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디치킨스는 “소설을 서툴게 짜집기한 사회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둘째, 디치킨스는 종교를 모종의 초(超)합리주의적 계몽주의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러한 계몽주의가 가져오는 ‘진보’에 내재한 거대한 모순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히로시마 원폭도 패니실린만큼이나 계몽주의의 정당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글턴의 또 다른 목적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올바르게도 이슬람보다는 기독교에 초점을 맞추는 이글턴은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권력에 포섭됨에 따라 초창기의 급진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을 마르크스주의가 스탈린주의로 타락한 것에 비유한다(그는 실제로 이에 관한 장의 제목을 “배신당한 혁명”이라고 붙였다).

기독교가 원래는 혁명적인 교리였다가 주장은 일리가 있다. 문제는 기독교의 타락이 필연이었는가 우연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글턴은 우연이라고 보는 듯 한데, 사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비교가 부적절해지는 것은 이 대목에서부터다. 마르크스주의가 스탈린주의로 변질된 것이 필연은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의 결과였다. 반면 기독교가 종교로서 살아남으려면 존재와 의식 간의 모순을 반영해야만 했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말한 “세속의 권세”와 타협해야 했다. 비록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꼭 로마 제국 후기의 기독교와 똑같은 형태로 변질될 것이라는 필연은 없었지만 말이다.

종교 때리기
《신을 옹호하다》는 이글턴의 강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의 장점이자 약점이다. 대부분의 강단 사회주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글턴만의 강연 스타일을 재현해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장점이다. 그러나 이글턴 특유의 인상주의적 스타일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는 약점이

다. 그의 글과 말은 항상 지적이고 재치가 있지만, 때로는 주제의 깊이에 비해 너무 산만하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 장 서두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을 다루는 데서 그렇다. 그 질문이란 이것이다.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전혀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느님을 들먹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글턴은 종교가 일정 정도 부활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하다. 어느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면 소외된 집단들 중 일부는 배타적 정체성이나 단호한 원칙에 집착함으로써 불안감을 달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글턴은 디치킨스로 대표되는 전투적 무신론이 득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덜 명확하다. 내 생각에 현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무신론적이라는 이글턴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이는 어째서 종교 때리기가 근래에 그토록 극성스러워졌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부분적인 이유는 왕년의 급진주의자들이 이미 오래 전에 체제에 포섭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적 지식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판적 지식인으로 행세하고 싶은 자들에게 종교는 안전한 표적이니 말이

다. 이글턴의 말마따나, “히친스, 도킨스, 마틴 에이미스, 살만 루슈디, 이언 매튜언 같은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전도사들은 급진 이슬람의 해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해악에 관해서는 놀라우리만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글턴이 “고도로 개명된 유형의 문화적 우월주의”를 논하면서 잠깐 언급한 바로 그 이유다. “인종을 가지고 타인을 열등하다고 낙인찍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종교를 빌미로 삼아 바깥의 어둠 속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사용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글턴이 이 책에서 올바르게도 비판 대상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도킨스는 아니지만)에게 있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독교를 제쳐둔 채 이슬람만 비난했다가는 아무도 그의 객관성을 믿어 주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시의적절하고 흡입력 있는 저작이다.

닐 데이비슨
영국 스트래스클라이트 대학교 연구교수

빈곤 노동의 현실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안수찬 외, 한겨레출판
1만 2천 원, 304쪽

얼마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계는 8월이 오면 시급 4천1백8원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화를 냈다. 8월 올려 준다니, 누굴 놀리는 거냐고. 그리고 그 4천1백 원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손가락이 뭉개져 나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4천원 인생》은 〈한겨레21〉에서 연재한 ‘노동 OTL’ 시리즈를 묶어서 낸 책이다. ‘OTL’은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이다. 절망적인 노동의 단면이라는 얘기다. 〈한겨레21〉 기자들이 ‘위장취업’해서 직접 경험하며 보여 준 세상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스쳐 지나가는 커다란 목소리들, “저기요”라고 지칭되는 감자탕 집의 지친 얼굴들, 폐쇄된 공장 안에서 숨죽여 일하는 ‘불법’ 사람들, 찰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노동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서처럼 기계를 돌리는 손들. 이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눈을 뜨렷하게 뜨지 않으면 그저 투명하다. 그래서 절망적이다. 이들의 삶 곳곳에는 저렴함이 스며들어 있다. 문이 열리자마자 큰 소리로 ‘어서오세요’를 외쳐야 하고,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렴함. 하루 살아가기도 바깥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저렴함. 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에선 언제나 ‘싼 게 비지떡’이다. 비싸다면 사람들은 그를 돌아보겠지만, 싸기 때문에 그들은 투명하다. 고기를 파는 회사가 마트에서 쫓겨나면 노동자도 함께 입에 풀칠할 일자리를 잃는다. 저렴한 사람들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경쟁시키는 거죠, 세상은 먹고 먹히는 거니까.” 《4천원 인생》은 빈곤 노동의 현실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각기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지는 비슷하다.

투명한 사람들에게도 삶이 있다. 죽도록 일하고 나면 바로 집에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결혼하고 싶어하고, ‘불법 사람’이라 밤 9시 전까지는 밖에 못 나가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려고 소주를 마시는, 먹고 숨쉬고 춤추고 연애하는 영혼들이다. 이들은 분명히 살아 있다. 이 책의 필자인 기자들은 위장취업해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다. 조금 알려진 것만으로도 희망의 씨앗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는 것에서 희망을 찾기도 한다. 나는 이 기자들이 ‘언니, 형, 동생’들에게 ‘소주 한 잔 하자,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내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쓴 편지에서 더욱 큰 희망을 느낀다. 그 지치고 젖은 손에 힘을 실어주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서영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재정 위기와 한국경제

연사: 정중남(다함께 활동가/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일시: 8월 1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에듀센터 807호(혜화역 4번 출구 3보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서부 사회포럼
인간본성 때문에 사회변혁이 불가능한가?

연사: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 계간 〈마르크스21〉 편집팀원)
일시: 8월 19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동부 사회포럼
마르크스주의와 인간본성

연사: 백은진 (다함께 활동가 / 단국대학교 사학과 강사)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일시: 8월 25일 (수) 오후 7시 30분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 5백 원)
문의: 02-447-0397, 010-9372-2746

서울 남부 사회포럼
지각 변동 중인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연사: 김영익 (다함께 활동가)
일시: 8월 26일 (목)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010-2401-1987

경기 남부 사회포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이정원 (이주노동 교육선전차장)
일시: 8월 2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역자골목 끝 농협사거리 원편 토방 건물)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다함께 교육토론포럼 월레토론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 학교와 민주주의

연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송재혁 (현직 중학교 교사)
일시: 9월 11일 (토)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주최: 다함께 교육토론포럼
문의: 010-5738-7747

다함께 지구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이메일: atge@paran.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elorum>
사무실: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이메일: atgsouthmail@jnbq.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highgate17>
사무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이메일: atgwestmail@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사무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이메일: jbaltogether@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jbforum>
사무실: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01번지 13호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기업 패리기’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여 준다.

최근에 터진 영포 게이트뿐 아니라 정치 위기에 직면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적 ‘친서민’ 정책들은 한국에서 국가의 힘이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장악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을 뿐 아니라 ‘외국 자본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KB금융과 포스코 등의 회장 선임에 개입했고 이들과 다달이 모임도 했다고 한다. 또, 온갖 금융회사들에게도 제 사람들을 앉혔다.

공장을 세우는 데 오랜 시간을 들여 갖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이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산업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가 훨씬 쉬운 은행 같은 금융자본들조차 정부의 협조(그들과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둔)가 사업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사례들은 국가가 자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명박의 한마디에 금융회사들은 이자율을 낮춘다고 호들갑이고, 삼성·현대자동차처럼 다국적기업이 된 재벌들도 부랴부랴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내놓고 고용을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경련 회장이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말이다.

개입

이번 위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가의 힘이 쇠퇴했다는 논의가 무성했다.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자본의 편의를 봐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원조라는 미국 정부조차 1980~90년대 위기에 거듭거듭 개입해 국가의 힘을 보여 줬음에도 이런 주장은 계속됐다.

국가가 덜 중요해졌다는 주장은 경제 위기로 분명 큰 타격을 받았다. 위기가 심각해지자 각국 정부들은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으로 자국의 은행·기업들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다. GM은 파산 위기에 처하자 유럽 자회사인 오펔을 매각하려고 했다. 독일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며 오펔을 캐나다와 러시아 컨소시엄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는 다른 EU 국가들의 반발을 샀는데, 오펔을 인수하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지역 공장들을 폐쇄하겠다고 이 컨소시엄이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GM은 결국 ‘미국 자본’이었다. 러시아로 자동차 기술이 넘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압력이 한몫해 성사 직전까지 갔던 협상은 결렬됐고 GM은 매각을 포기했다. 독일 정부는 보조금 지급 약속을 철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부도 위기에 처한 GM대우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더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해운·건설회사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과 대조된다. 한국 정부도 GM의 국적이 어디인지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자본의 이해관계를 근본에서 거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세계화 시대 이전인 국가자본주의 시대에도 그런 힘은 없

었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요즘보다 훨씬 강했던 때에도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자본의 해외 이탈이나 투자 철회(혹은 그 위협)에 굴복해야 했다.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이 급속한 공업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수출에 목맨 것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의 엄청난 중공업 투자가 충분한 이윤을 내지 못하자 한국 경제는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다.

굴복

1980년대부터 많은 국가들은 국내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에서 해외 자본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본 축적 방식을 변경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은 세계 최대 해외 기업들의 수중에 있는 신기술·자금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 는 분명하게 이 방향으로 나갔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구조조정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자 운동을 공격하고, 규제·금리·재정 정책을 행사해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특히 한국처럼 오랜 기간 정부가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해 온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여전히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국가가 나서라고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결국에는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논리에 따라 복지나 임금을 공격하게 되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를 뛰어넘는 대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강동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 어느덧 3년 전이다. 당시에는 이 위기를 “신용경색”이라고 불렀는데, 다소 기이하고 지엽적인 현상처럼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19세기 말과 1930년대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이라 부르는 것으로 발전했다.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점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지배계급이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토니 블레어가 훌륭한 총리였다고 믿는 것만 빼면 꽤나 통찰력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칼럼니스트인 필립 스티븐스의 7월 30일치 칼럼이 이 점을 보여 준다.

스티븐스는 금융 규제의 새 시대를 열겠다던 정치인들의 호언장담에도 은행들과 신용평가기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곳곳이 지켜냈다고 지적한다.

스티븐스의 결론은 이렇다. “3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것을 빼면 세상은 변한 것이 없다. 시장이 우리를 지배한다. 불만 있나?”

당연히 불만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위기를 촉발한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 시도를 대체로 잘 막아 냈다는 스티븐스의 지적은 옳다.

스티븐스의 동료인 존 개퍼는 7월 31일치 〈파이낸셜 타임스〉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이번 주에 세계 각국의 금융 감독 기관들은 은행의 자기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합의했다. 원래대로라면 규제를 피해 가려는 은행들에 맞서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제재 의지를 보이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국제결제은행(BIS)은 애초의 기준을 희석시켜 은행들에게 8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우위

은행들이 또 한번 승리한 것이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가 금융개혁 법안에 서명하기 직전에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규제 법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금융가들은 다른 모든 이들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미국의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 개혁은 크고 작은 방식으로 ... 미국 은행들의 이윤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를 막으려고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한 금융가들은 이제 교육정책으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큰 91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리스를 둘러싼 5월의 대소동 이후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였다. 많은 독일 은행들이 주택시장 버블이 한창일 때 위험한 미국산 금융상품을 과다 복용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나 막상 테스트를 수행해 보니 스페인 은행 다섯 곳, 독일 은행 한 곳, 그리고 그리스 은행 한 곳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테스트가 조작됐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독일인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차우는 길길이 뛰며 이렇게 쏘아붙였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유럽연합이 적용한 기준을 누군가가 자동차나 아이들 장난감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데 똑같이 적용했다면 그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 웃기지도 않는 테스트의 목적은 유럽연합이 마치 뮌가를 해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 모든 사실은 대서양 양쪽에서 은행들의 로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실감케 해 준다. 그러나 은행들의 힘을 진정으로 보여 주는 것은 바로 유럽 전역에서 도입되고 있는 긴축 정책이다.

이번 위기는 민간부문에서 시작됐지만 엄청난 공공지출 확대 덕분에 그 충격이 완화됐다. 경제학자 마크 잔디와 앨런 블라인더는 만약 미국 정부가 1조 7천억 달러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2009~2010년에 미국 GDP의 하락폭이 4퍼센트가 아닌 12퍼센트를 기록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이를 줄이려고 각국 정부는 이제 공공부문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에게 또 하나의 승리다. 은행들은 거의 말 그대로 돈을 ‘먹고 튀고’ 있다.

그러나 이 스토리에는 아직 반전이 남아 있다.

만약 각국 정부의 긴축 시도가 좌절된다면 시장의 지배를 재확립하려는 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의 결과에 실로 많은 것이 걸려 있다.

번역 천경록

체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이민숙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체벌 문제가 다시 뜨겁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돼 온 체벌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된다. 체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사회적 쟁점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논란만 무성한 채 호지부지돼 왔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최근에는 MB의 경쟁만능, 특권·차별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학생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다만, 진보민주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 교육감의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발표로 다시 논란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체벌 논란을 몇 차례 거치면서 이제는 ‘교육적 체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솔직한 답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랑의 때’란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율과는 털끝만치도 어울리지 않는 야간자율학습이란 말에서처럼, ‘교육적 체벌’, ‘사랑의 때’는 모순적인 조합에 지

나지 않는다. 만약 교육적 체벌이 존재하고 그것이 유효하다면, 사법체계 내에서 교화를 위한 태형 역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형식적으로나마) 군대에서도, 사법체계에서도 사라진 신체적 벌이 유독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학교에만 버젓이 존재하는 것은 기형적이다.

유혹

물론 교사로서 체벌에 대해 조건 없는 반대를 대놓고 주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 턱없이 부족한 교사 수로 말미암은 과도한 업무량(수업시수)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학원에서보다는 학교에서 더 끊임없이 탈주를 꾀하는 현실도 결코 녹이지 않는다.

수업과 학생지도 과정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교사 처지에서는 체벌을 통한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직접 체벌을 하든 아니든 엄포에 그치든 교사들에게 ‘체벌권’은 심리적 방어막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원에서는 체벌이 계약 조건에도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 체벌만 문제 삼는 것에 일부 교사들이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최근 학생인권 침해가 점점 심해지는 근원적인 이유인 입시위주·경쟁만능의 반인간적인 교육정책까지 겹치면 문제는 점점 더 해결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시각을 좀 교정해 봤으면 한다.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나 제도적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둔다면 청소년 인권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물론 사회적 해결 노력을 계속 촉구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에게는 최소한의 OECD 기준에 부합할 만한 교육환경의 개선율, 정치권에는 학생인권 법제화를 포함한 학교자치 법제화를, 학교에는 당장의 인권 의식 개선과 교육 내용의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가 더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1차적 책임 의식을 학교와 교사들이 먼저 사겼으면 한다. 도대체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가르칠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위키리크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 폭로 이후

오바마는 거짓말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민감한 전쟁 정보가 폭로돼 개인이나 작전이 위협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오바마), “위법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의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민주당 상원의원 존 케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질겁했다”(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지난달 기밀문서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를 공개하자 미국 지배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들은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은커녕 문서 유출로 반전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오바마는 문서 유출 직후 토크쇼에 출연해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로 새로운 것이 없고”, “가치 있는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민간인 학살을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일”로 취급하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진작에 오바마의 전쟁이 됐다. 올해에만 민간인 1천3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8월 들어 미군 전투기가 동부 남가르 주를 폭격해 민간인 30여 명이 죽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장례식을 댔친 폭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압도 다수 미국인들은 오바마와 생각이 다르다. 미군 사망자 증가와 문서 유출로 오바마의 전쟁 수행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래서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파키스탄으로 전쟁을 확장하고, 파키스탄 정부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도 탈레반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나토 회원국 중 처음으로 네덜란드가 8월 1일부터 철군을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2006년부터 1천9백 명을 파병해 군인 24명이 목숨을 잃고서도 파병을 연장하려 했다. 결국 반전 여론에 부딪혀 연립정부가 붕괴하자 철군을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와 나토군 사령부는 네덜란드 철군이 전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선한 전쟁’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철군 여론에 시달리는 정부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1년까지 2천8백 명을 철군하겠다고 했지만 조기 철군 여론에 시달리고 있고,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에서는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우리는 오바마와 이 전쟁을 지원하는 이명박 정부에 물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더 필요한가.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군해야 하는 이유가 더 필요한가.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더 필요한가.

추가 공개

위키리크스 측은 이번에 폭로한 9만 건이 넘는 기밀 문서들은 나뉘어 걸려진 것이라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서 1만 5천 건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사이트 폐쇄를 운운하며 ‘공격적’ 수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우파들은 정보 유출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출된 문서에는 파키스탄 정보기관이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존 케리가 사건의 파장을 의식해 한 말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지난 시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 카스피해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려고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파키스탄 정보기관이 창조해 낸 합작품이 바로 탈레반 아닌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원 유가족 소송

파병이 낳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즉각 철군해야

지난 7월 말 샘물교회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피랍 후 정부가 탈레반과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협상 조건이나 사망 경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07년 여름 샘물교회 선교단원 32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 탈레반은 선교단원 납치 직후 한국군이 철군하지 않으면 이들을 살해하겠다고 경고했다.

나는 피랍 사건이 알려진 날부터 ‘무



2007년 피랍 사건의 원인은 파병에 있었다.

사구화와 파병 한국군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당시 정부는 즉각 철군이라는 진정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넘겼다.

유가족들은 납치된 가족들을 살려 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에 애원했지만 정부는 끝내 철군을 약속하지 않았고 선교단원이었던 배형규·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다섯 달 전 바그람 미군 기지를 지키다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반전 운동이 경고한 비극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환영하지

않는 선교 활동이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교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한 지금 이 피랍 사건을 단지 과거사로 치부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파병이 제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비극의 재발을 막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즉각 철군’이다.

김덕엽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검찰이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8월 15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이다.

우익 단체들은 한상렬 목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일 숭배자”, “목사가 아니다” 등 온갖 비방도 쏟아낸다.

그러나 한상렬 목사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복판을 일으켰고, 대북 강경책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명박 정부에 천안함 사건의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고 옳게 지적했다.

한 목사가 북한 체제·정권을 우호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과 논쟁을 할 문제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뉴라이트 언론들이 보도했던 한상렬 목사의 ‘북한 찬양 남한 저주’ 기도문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기도문을 왜곡·날조 보도한 것이 밝혀졌다.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 악법과 제도가 문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남북 민간 교류를 거의 차단해 놓고는 ‘정부 승인’ 없이 방북했다

고 문제 삼는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개각에서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은 유임해 대북 압박·봉쇄 정책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서해 군사 훈련과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를 낚으며 한반도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상렬 목사 체포영장 발부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인 정부와 우파들이 다시 한번 진보진영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한상렬 목사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일단 방어해야 한다.

이재환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가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여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정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